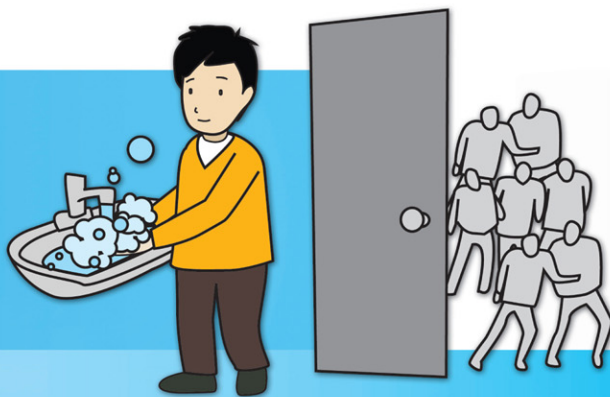
Weekly 공감
2009 09.09
No.28(통권 129호)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절망 갚고 희망 빌린다
따뜻한 서민금융
중점기획
세금 줄여 서민 살리고
세원 늘려 경제 살리고
비빔밥, 중국인 입맛을 사로잡다

함께 지켜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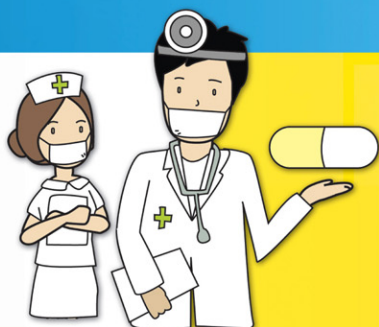
우리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행동요령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외출 후에도, 평소에도 손 씻기를 습관화해주세요.

에티켓도 잘 지키고!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면,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는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사람 많은 곳은 조심조심!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사람이 많은 장소는 되도록 피해주세요.

걱정없이 회복을!

신종인플루엔자는 가벼운 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경증의 건강한 사람은 항바이러스제 치료 없이 회복됩니다.

편히 쉬고, 많은 양의 수분을!

건강한 사람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진료를!

만성심폐질환, 천식, 당뇨, 비만, 임산부나 노인 분들은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민 고통은 아직도 진행형… 금융지원이 더욱 필요한 시점"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9월 2일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피치사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 세계 금융시장과 경제가 질곡에 빠져 있던 지난해 11월에 10개국의 신용등급이 하향됐는데, 이 가운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주가와 외환보유액이 회복되는 등 경기회복의 청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겪는 서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서민 고통을 덜어주는 게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해 하반기에는 서민금융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첫째로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직장이 있더라도 소득감소 등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자를 감면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채무를 감면 또는 조정받은 사람은 1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9월부터는 소득이 없는 일시적 실직자도 구직활동을 하거나 희망근로봉사를 하면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둘째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저신용층(신용등급 7~10등급)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은행에서 저신용자 전용상품(희망홀씨 대출)을 대출해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용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또한 대부업체를 이용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용회복기금에서 은행 채무로 전환해주고 있다. 전환된 금리는 9.5~13.5퍼센트 수준이다.

더불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해 사채시장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사후 대책도 시행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공익광고, 상담센터 운영 등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검·경찰,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 대부업체 단속을 강화해 올 상반기에 1만8천여 명을 검거했으며, 9억원 이상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돌려주었다.

셋째로는 금융회사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은행, 보험회사의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을 출연받아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설립해 무담보 소액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2008년 2백71억원, 2009년 4백40억원 등 총 7백여 억원의 마이크로 크레디트 대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취급기관도 3백여 곳으로 확대해 전국 곳곳에서 골고루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금액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서민이 웃어야 나라가 웃을 수 있다. 어려운 시기를 겪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금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G

이 주의 공감 Weekly_2009.09.09_No.28(통권 129호)

14

기획특집

서민경제 살리는 **따뜻한 금융**

신용도가 낮은 서민과 영세상인들이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힘들어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높은 이자 부담으로 생활은 나날이 찌들어가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서민들이 떠안고 있던 절망과 고통의 빚을 청산하고 희망을 빌려주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서민을 위한 따뜻한 금융이 그것이다.

mcst.go.kr KOR 문화체육관광부

10

표지 설명 낯설고 물선 이국에서 맞이하는 가을. 밤톨처럼 야무진 아이들이 있어 결혼이민 여성들의 마음은 넉넉하기만 하다. 9월 3일 충남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에서 열린 밤줍기 행사 모습.

Weekly 공감

발행일 2009.9.9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Weekly 공감〉 27호(9월 2일자) '중점기획-절반의 성공, 나로호의 꿈' 기사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격려와 함께 다음엔 꼭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댓글을 올렸습니다.

"8전9기 끝에 쏘아올린 나로호가 정상궤도 진입에 실패했다고 실망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우주에 대한 꿈의 날개를 펴는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실패는 더 큰 기회와 도약의 발판이 된다. 우주로켓산업은 한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가늠하고 국가 경제능력을 인정받는 실험대다.
그동안 적지 않은 국민 세금이 재원으로 사용됐지만, 고급인력 양성과 우주로켓 개발에 대한 기술 축적은 헛되지 않았다고 본다. 이번 나로호 발사에 관여한 과학자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실망하지 말고 심기일전해 반드시 우리 기술로 우주를 정복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각오를 더욱 새롭게 해주길 바란다."_ jbg1219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서 가슴 졸이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발사체 1단이 점화되자 거대한 불꽃을 뿜으며 솟구치는 나로호를 볼 땐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목이 메었다. 이번 발사를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우주사업에 대한 충분한 예산 지원, 연구원들의 복리후생과 인력 증강, 향후 추진 계획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길 바란다."_ URANOS

〈Weekly 공감〉 27호 '핫 이슈-신종플루 백신 연내 1천만명분 예방접종' 기사와 관련해 신종플루에 대한 우려의 글과 함께 정부 당국에 건의하는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휴~ 신종플루 때문에 걱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고 건강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_ 두루누리

"신종플루 백신 접종 순위는 반드시 보험 적용이 가능한 대상자 목록 순위로 결정해야 한다. 의료관계자와 초중학생들만 단체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60개월 미만 소아들은 어린이집에 다닌다. 몸이 쇠약한 60, 70대 고령자들도 우선순위가 돼야 하고, 단체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도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또한 임산부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_ 칸타빌레

"언론, 방송, 정치권에서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다. 물론 예방도 해야 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감기처럼 지나갈 수 있다고 한다. 전염성은 강하나 치사율은 독감보다 더 낮다는 통계도 있다. 공포감을 조장하는 게 되살아나고 있는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된다. 언론들은 신종플루에 대해 예방 차원의 설명은 하되 불필요한 공포심을 조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신종플루의 공포심이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_ hl5fgq

Weekly 공감(gonggam.korea.kr), 청와대(www.president.go.kr),
대한민국정책포털(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등에 실린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자전거 신호등이 설치되면
자전거 이용이 좀 더 안전해지겠죠.

제1회 '방송통신 이용문화 아이디어 공모전'

10월 29일까지 접수… 총상금 1700만원

방송통신위원회는 건강하고 합리적인 방송통신서비스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방송통신 이용문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성별, 연령 등의 구분 없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뿐 아니라 5인 이하의 팀도 응모 가능하다.

▶ **공모전 주제와 형식**

1. 합리적인 방송통신서비스 이용방안 : '방송통신서비스 편리하게 이용하기' '방송통신서비스 올바르게 이용하기' '방송통신서비스 알뜰하게 이용하기' 등을 주제로 손수제작물(UCC), 플래시, 만화 형식으로 제작.
2. 건강한 방송통신 이용문화 조성 : 의인화된 캐릭터나 포스터로 제작.

※ 두 주제 모두 방송통신서비스 전체 또는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으며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도 가능.

▶**일정** 10월 19~29일 접수, 11월 16일 결과 발표

▶**접수** 공모전 홈페이지(www.usercontest.com) 인터넷 접수

▶**시상** 대상(1명) 상장 및 상금 4백만원, 최우수상(4명) 상장 및 각 상금 2백만원, 우수상(8명) 상장 및 각 상금 50만원, 장려상(10명) 상장 및 각 상금 10만원

▶**시상식** 11월 24일 예정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 02-750-2673, www.usercontest.com

공감 퍼즐

1			2		
			3		4
5					
6	7			8	
	9				

빈칸의 정답을 적어 주소, 연락처와 함께
9월 16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과 녹색생활 실천 머그컵을 드립니다.

〈Weekly 공감〉 26호(8월 26일자) '공감 퍼즐' 정답과 당첨자

가로 1 자유무역 **3** 기부 **4** 해소 **8** 르포 **9** 사회안전망
세로 1 자부심 **2** 무공해 **5** 소르망 **6** 발사체 **7** 하안거

당첨자

김미선(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서영희(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이은영(광주시 북구 문흥동)
전선연(경남 의령군 의령읍)
조경구(경기 광주시 도척면)

가 로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생긴 신용불량 상태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중 채무자의 경제회생을 돕기 위해 각종 OOOO 지원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3. 담보물을 세우지 않는 것.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디트 OOO 무보증 소액대출"
6. 국가나 지자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이나 주민들에게서 거둬들이는 금전.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세제개편과 함께 고소득 전문직에 OO을 더 물리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8. 장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
9. 산에서도 싸우고 물에서도 싸웠다는 뜻으로, 세상의 온갖 어려움과 고생을 다 겪었다는 말.

세 로

2. 어떤 직무나 임무에 힘씀. "군 OO를 무사히 마치고 제대하다."
4. 보증하는 사람. "이 대출은 OOO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5. 집이나 방, 사무실 등을 다달이 빌려 쓰거나 빌려 쓰는 데 드는 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OO 일부를 보조하는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주택 바우처제도)'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7. 북한에 있는 명산. 이산가족 상봉 장소이기도 하죠. "그리운 OOO~"
8. 조선 후기에 서울 종로에서 '품질이 좋은(上) 쌀(米)'을 팔던 가게.

동아DB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료진이 서울시청 앞에서 신종플루 상담을 하고 있다.

신종플루 10월 초가 고비 개인위생 철저히 하자

국민 1336만명에 백신 접종 목표, 거점약국 2000곳으로 확대

추석 이후인 10월 초반이 향후 신종플루 대유행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8월 15일 이후 신종플루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총력을 다해 신종플루 확산에 대처하기로 했다.

최근 신종플루(인플루엔자A·H1N1) 사망자가 늘고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백신 접종과 항바이러스제 사용으로 신종플루 확산을 차단하고 의료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9월부터 인플루엔자 유행 수준이 증가, 10~11월 중 유행의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으며 개학 후 잠복기가 끝나는 9월 중순, 추석 이후 10월 초반의 양상이 향후 유행 확산을 가늠할 수 있는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9월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11월 중순부터 내년 2월까지 전 국민의 27퍼센트(1천3백36만명)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접종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백신접종 전까지는 적절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며, 학교 등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각 부처가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백신 접종은 의료인 등 방역요원(1백만명), 아동·임산부·노인 등 취약계층(4백20만명), 학생(7백50만명) 및 군인(66만명) 등을 우선 고려하게 된다. 우선순위는 이달 중 보건복지가족부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단체와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접종은 보건소에서 무상으로 해주고, 이 밖의 접종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접종비만 본인이 부담(백신은 무상 제공)하게 할 방침이다.

거점병원 등 24시간 응급의료 시스템 강화

또 조기에 환자를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하기 위해 거점병원, 약국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거점병원의 격리진료 공간 설치 · 운영비용을 실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거점병원과 약국 의료진을 위한 항바이러스제가 지원된다. 보건소에도 의료인 전용 항바이러스제를 별도 보관해 필요할 때 즉시 공급하기로 했다.

거점병원을 위한 전용 상담·안내센터가 질병관리본부에 설치되며 효율적인 투약관리를 위해 거점약국을 5백52곳에서 모

든 약국의 10퍼센트 수준인 2천 곳으로 확대한다. 또 휴일·야간 진료를 위해 거점병원의 응급실 운영도 강화되며 거점약국에 대한 휴일·야간 당번제 관리를 철저하게 해나갈 계획이다.

학교·학원, 군·전경,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신종플루 예방과 환자 발생 대처 등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관리하고 특히 신종플루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보건소와 협의, 휴교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심각’ 단계로의 격상이 국가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외국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다음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격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난 7월 21일 이후 전염병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돼 유지되고 있다.

1000명 이상 대규모 행사 취소 혹은 연기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사망자 사례 등을 보면 고위험자에 대한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만성질환자, 임산부, 노인 등 고위험군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진단, 치료 등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하고 “거점병원·약국 이용방법, 검사비용, 고위험군의 범위와 대처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같은 날 오전 한 40대 여성이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열렸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이날 회의에 앞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이 8월 31일 신종플루 양성판정을 받은 후 9월 1일 저녁 뇌부종 및 뇌출혈을 일으켜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측은 “지금으로서는 신종플루가 뇌사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여성은 앞서 숨진 신종플루 사망자들과 달리 고령도 아니고 앓고 있던 질환도 없는 등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았다. 신종플루에 감염돼 숨진 사람은 8월 15일 경남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숨지면서 첫 사망자가 나온 뒤 16, 27일 60대 여성과 남성, 9월 2일 40대 여성 등 모두 4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에 따르면 8월 31일 현재 치료 중인 우리나라의 신종플루 감염환자는 1천7백96명이며 누계 환자는 4천2백93명이다. 9월 3일 현재 모두 3명(뇌사 상태 환자 포함)의 중증 환자가 입원해 있으며 네 번째 사망자와 뇌사 상태인 환자에 대해서는 각각 추가 역학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는 우리 음주문화 중 하나인 술잔 돌리기가 신종플루의 전염 경로인 비말(飛沫·입에서 배출되는 작은 물방울) 접촉을 통해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술잔 돌리기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동아DB

학교마다 손씻기나 소독, 체온측정 등을 통해 신종플루 확산 방지에 애쓰고 있다.

9월 3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알콜 섭취 자체도 신종플루에 대한 신체의 대응 능력을 떨어뜨린다. 음주는 인체 거의 모든 부위에 영향을 끼쳐 암, 당뇨, 간질환, 소화기계 질환뿐 아니라 호흡기 감염 등의 각종 급·만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 요인이 될 수 있다. 질병에 대한 알콜 기여도를 살펴보면 폐렴 27퍼센트, 결핵 23퍼센트, 호흡기질환 27퍼센트로 알콜이 예상보다 높게 호흡기계 질환 발병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9월 3일 1천명 이상 참가하는 대규모 문화·체육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강력히 권고했다. 올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에서는 모두 7백77건(연인원 4천만명)의 지역축제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9월 3일 현재 71건이 취소되고 18건이 연기됐다. G

글·박경아 기자

질병관리본부 Tel **1588-3790**
국민건강보험공단 Tel **1577-1000**
보건복지가족부 Tel **129, 1339**

동아DB

지난 7월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개최된 G8(주요 8개국) 확대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파이낸셜타임스〉 공동 기고

"G20가 나서 균형성장 선도하자"

이명박 대통령과 케빈 러드 호주 총리가 공동명의로 작성한 기고문이 9월 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게재됐다. 이 기고문은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이 나서서 균형 있는 세계경제를 이끌어가자는 양국 정상의 뜻을 담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불황 상태가 지속되면서 불안과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케빈 러드 호주 총리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G20가 균형성장의 길 선도해나갈 수 있다'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을 게재했다. 그동안 G20 회원국들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안정적인 글로벌 금융시장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G20 글로벌 리더십을 통해 앞으로의 당면 과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유례없는 금융·경제위기에 직면해 G20 정상들은 세계 성장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까지 G20 국가들이 취한 재정, 통화 및 금융 부문의 정책적 대응은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세계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G20의 정책들이 잘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필두로 하여 프랑스, 일본 및 독일 역시 2008년 상반기 이래 최초로 지난 2분기에 분기별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긍정적 소식은 신뢰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세계경제의 회복은 아직 확고하지 않다.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다. 세계는 G20의 글로벌 리더십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첫 번째 과제는 기존 공약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발표된 경기부양책 중 상당 부분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으며, 금융체제 및 국제 금융기구의 개혁과 재원 확충, 개도국 지원에 관한 G20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도 할 일이 많다.

세계경제의 성장이 지속가능하고 2010년에 세계경제가 호전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G20 정상들은 기존 공약은 이행되며 필요한 순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중요한 정책적 지원이 성급히 철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확신시켜야 한다.

세계경제의 두 번째 과제는 위기에서 회복으로의 전환을 관리하는 것이다. 위기하에서 이행된 예외적인 조치들은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이었다. 그러나 성장세가 회복됨에 따라 각국 정부는 정책 기조를 상당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적자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향후 위기가 재발할 위험이 있다.

1930년대 후반에는 각국의 출구전략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재정·통화정책이 회복을 저해했고, 결국 많은 국가들이 1937년과 1938년 더블딥 침체에 빠졌다. 이번에는 출구전략을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위기 시의 예외적인 조치들을 철회하는 데에는 시기, 공조, 신뢰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G20는 향후 진행될 출구전략을 투명하고 명확한 프로세스를 통해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은행 지급보증을 포함해 재정, 통화 및 금융 부문의 조치들을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G20는 공통의 원칙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촉진하고 국제 모니터링과 '동료 간 검토' 프로세스를 이행함으로써 출구전략의 신뢰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출구전략은 단절된 정책이 아니다. 출구정책은 중기 및 장기 정책목표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출구전략이란 좀 더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해 위기 후 정책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의 초기단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각국 개발전략, 세계경제 성장과 균형 맞춰야

세 번째 주요 과제는 좀 더 균형 있는 세계경제 성장으로의 전환이다.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G20의 정책체제에 대한 협력과 유연성이 모두 필요하다. 유연성이 필요한 이유는 각국은 경제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국만의 경로가 있기 때문이다. 공조가 필요한 이유는 현 위기를 통해 세계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각국이 독자적으로 취한 거시경제 전략은 바람직하지 못한 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

FT Innovate 2009
Innovation Strategies to Deliver Success in Tough Times
10th & 11th November 2009 | ANdAZ Hotel | London

FT.com
COMMENT
Opinion

The G20 can lead the way to balanced growth

By Lee Myung-bak and Kevin Rudd

Published: September 2 2009 20:04 | Last updated: September 2 2009 20:04

Confronted by a financial and economic shock unmatched in the postwar era, leaders of the Group of 20 have been united in their commitment to take all necessary action to restore global growth. To date, the fiscal, monetary and financial policy response across the G20 countries has been unprecedented – amounting to the largest global stimulus the world has seen.

Signs of renewed stability in global financial markets confirm that the G20 policy measures put in to place are working. China, South Korea and other Asian countries are leading the way, while in June France, Japan and Germany recorded their first quarter of growth since early 2008.

While such positive news has helped restore confidence, a global recovery is not assured. This is no time to be complacent. The world faces several new challenges that will require leadership from the G20.

9월 3일자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넷판에 게재된 이명박 대통령의 공동 기고문.

Signs of renewed stability in global financial markets confirm that the G-20 policy measures put in to place are working. China, South Korea and other Asian countries are leading the way, while in June France, Japan and Germany recorded their first quarter of growth since early 2008.

세계 금융시장에서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G20의 정책들이 잘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필두로 하여 프랑스, 일본 및 독일 역시 2008년 상반기 이래 최초로 지난 2분기에 분기별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거시경제 정책 공조를 위한 유연한 체제를 만드는 것이 G20의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9월 24, 25일 개최되는 피츠버그 정상회의는 G20 정상들이 세계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피츠버그에서 G20 정상들은 세 단계의 프로세스에 합의해야 한다. 첫째로 각국 정부는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국내적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로 각국은 금년 말까지 IMF에 자국의 전략을 전달하고, IMF는 각국의 전략이 세계경제의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목표와 일관되는지에 관해 검토를 해야 한다. 셋째로 G20 정상들은 한국이 G20 의장국을 수임하는 2010년 중 다시 모여 위기 후 세계경제 관리체제 내에서 상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책임과 조치에 합의해야 한다.

이 과정은 독일이 제안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헌장' 같은 글로벌 규범 마련을 통해 일관되게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만병통치약과 같은 회복 방안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각국은 자국의 경제상황에 맞는 고유한 개발전략을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각국의 개발전략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나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세계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과 호주는 여타 국가와 협력해 피츠버그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해 이행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회복과 금융·경제 안정을 이루고자 한다. 우리는 개방되고 역동적인 경제국가로서 우리의 번영이 세계경제의 견고한 성장과 안정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G

정리 · 김민지 기자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겸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

"규제개혁 성과 나타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느냐,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지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정부 경제정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9월 1일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에게 눈길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전환기에서 살아남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생존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자문기구로 만들어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의 기업과 산업은 물론 대한민국 자체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극복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 불리는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지난 1월 기획재정부 장관 퇴임 후 경제정책 일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었다. 그가 9월 1일 청와대 인사 개편에서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 그만큼 대통령이 그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방증이다.

국민들도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강력한 경제라인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과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을 겸하게 된 강만수 위원장은 "부족한 점이 많은데 다시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경제특보로서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데 충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지금까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성과를 평가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는 현실에 맞지 않아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단지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공급가격도 낮췄습니다. 법과 제도의 선진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8월 3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

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고치고, 규제의 근본 틀도 개별 기업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경쟁력 강화의 기본이 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확충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는 운전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잦은 교통신호 위반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작은 질서 위반은 사회 전반의 법질서 경시풍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더라도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회적 불신풍조도 개선돼야 합니다.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불신에 기초해 마련된 절차들을 개선해야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사회구성원 간 신뢰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소, 우편번호체계 개선 등과 같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는 과제들도 꾸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8월 26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우리 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 게 눈에 띄더군요.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해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그동안 술을 산업으로 육성하려 하기보다는 세원 관리에 치중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프랑스 와인, 영국 위스키, 일본 사케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술은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상품이자 자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입니다. 쌀 10킬로그램의 가치는 2만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증류주로 가공하면 20만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거듭납니다.

세계가 놀랄 만큼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이젠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올해 우리나라의 상반기 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인 1.2퍼센트를 달성했고 경상수지는 유사 이래 최고인 2백17억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환율효과와 재정효과를 빼면 위기상황에서 완전히 탈출했다고 하기엔 이릅니다. 중·장기 전망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선진국의 저축투자갭과 디플레이션갭이 크고 재정 확대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을 겸하게 됐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데 다시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위기대책을 선제적이고 확실하며 충분하게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가 조기에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다시 한번 국운 융성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세부적인 정책현안은 경제수석과 내각이 중심이 돼 대처하도록 하고 저는 경제특보로서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조언하는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강만수 위원장은 MB노믹스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따뜻한 시장경제라고 정의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활동이 경제특보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점이 있습니까.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소관부처 현안에서 한 걸음 벗어나 중·장기적인 관점, 국가전체적인 시각에서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좀 더 긴 호흡을 갖고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구상하고 계신 'MB노믹스'의 큰 그림이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MB노믹스는 한마디로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따뜻한 시장경제'입니다. 자율과 경쟁의 최대 보장, 약자와 경쟁탈락자에 대한 지원, 정치논리보다 경제논리 우선, 수요 통제보다 공급 확대 우선, 일자리를 통한 분배 개선, 법의 지배 확립, 개방과 글로벌 스탠더드 추구 등 7대 원칙에 따른 정책 운용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한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국운 융성의 계기를 맞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G

글 · 최호열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미디어 선진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도약 !

- 마침내 언론 통폐합 29년의 낡은 규제가 풀렸습니다.
- 방송과 통신, 신문 간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 미디어 융합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 대기업과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을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이 늘어납니다.
-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미디어 융합 시대, 대한민국이 앞장섭니다 !

대한민국정부

기획특집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가 하면, 고리사채업자의 협박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신용도가 낮은 서민과 영세상인들은 시중은행에서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리기 힘들어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와 사채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빚의 악순환 끊기'에 나섰다. 서민들이 떠안고 있던 절망과 고통의 빚을 청산하고 희망을 빌려주는 게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 목표다.

무담보
소액 대출

어려울 때 돕는 게
진짜 서민금융

일러스트 · 이우정

"서민들 빚의 악순환 끊겠다"

가난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고, 신용이 낮기 때문에 고금리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빚에 허덕여 더욱 가난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정부는 서민과 영세업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 9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 회복세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지만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은 아직 불황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장 필요한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일부터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8월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중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가계 신용잔액은 6백97조7천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1퍼센트(약 14조1천억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5.7퍼센트 늘어났다. 한 가구당 빚이 4천1백84만원에 이르는 셈이다.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신용자(7~10등급)의 어려움은 더하다. 서민과 영세상인이 대부분인 저신용자들은 돈이 급하면 어쩔 수 없이 금리가 비싼 대부업체 등을 찾게 되고, 그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진한(가명·56) 씨는 낡은 식당을 수리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시중은행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했다. 결국 대부업체에서 연 39.5퍼센트의 고리로 2천여만원을 빌렸다. 이자만 월 66만원, 원금과 합해 월 1백20만원 넘게 갚아야 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장사가 되지 않아 이자를 갚기도 버거웠던 이 씨는 결국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및 전환대출 지원 강화, 신용 낮은 서민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디트 활성화, 사금융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등 기존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더욱 강력한 서민금융 대책을 확정해 추진하겠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3만5천여 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퍼센트 증가한 수치다. 개인회생은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경제적 사망신고'라 불리는 개인파산 신청도 꾸준해 7월까지 약 6만7천여 명에 달했다. 올 한 해에만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다시 한 번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중도실용 정책을 강조했다. 서민층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돈 문제다. 이에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확대 등 서민들의 돈 고민을 줄이기 위한 대책 강구에 집중하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및 전환대출 지원, 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 등 신용회복 지원 강화, 신용 낮은 서민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디트 활성화, 사금융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등 기존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은 물론 9월 중에 더욱 강력한 서민금융 대책을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고금리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7천억원의 예산을 확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채무를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8월 말까지 1만4천여 명이 대출전환 혜택을 받았다. 연체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감면하고 원금을 최대 8년에 걸쳐 분할 상환토록 지원하는 '채무재조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5만5천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윤진 과장은 "경기악화로 어려워진 서민이 늘면서 전화를 통한 상담 건수가 하루 평균 2천여 건에 달하고 인터넷을 통한 상담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이 이 제도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18개 시구청 민원실에 '서민금융 종합상담 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동아DB

정부는 대부업법을 개정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영철 기자

정부는 9월 중에 강력한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강북구의 전통시장인 수유시장.

신용회복위원회는 성실하게 빚을 갚는 채무 불이행자의 경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일시 실직자(3개월 이상 연체자)가 구직활동 등을 증명하면 이자를 탕감해주고 원금을 연리 2퍼센트로 최장 8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민층 가장 큰 어려움 '돈'… 서민금융으로 지원

서민과 저소득층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담보 소액대출을 해주는 기관과 제도를 늘리는 것도 주요 과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현재 수십 개에 불과한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을 2백~3백 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이기찬 서기관은 "은행과 서민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정부 재정과 휴면예금, 기부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도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최근 잇따라 저금리의 서민맞춤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고금리인 제2금융권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상당한 금리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상품들은 8월 말 현재 9만명에게 4천7백29억원의 도움을 주었다.

이 밖에도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 근로자 중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근로소득이 있으면 최고 5백만원까지 저리로 빌릴 수 있다. 중소기업청과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에게 최고 5백만원까지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무점포 자영업자(노점상 등)에게도 심사를 거쳐 최대 3백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사채 때문에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들이 심심찮게 벌어지는 등 대부업체의 살인적 고금리는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대부업법을 개정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등록 대부업체가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거나 대출 자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서민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해 서민금융에 대한 상시적인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여의도연구소장인 진수희 의원은 "국가가 기금을 통해 서민들의 신용을 보증해주면 더 낮은 금리, 더 넓은 수혜로 경제위기에 따른 서민층의 경제력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G

글 · 최호열 기자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마켓론'

상인회가 관리… 형편 맞게 상환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됐던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에게 희망이 생겼다. 소액서민금융재단과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마련한 전통시장 소액대출은 4%대의 저리로 긴급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두부 판매점 사장 박진효 씨는 "급전이 필요할 때 전통시장 소액대출이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대출

추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곳곳에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소매상인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올여름 매상이 오르지 않아 추석상품을 구매한 대금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업형 슈퍼마켓에 상권을 뺏긴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은 추석맞이 점포 단장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 형편이다. 급한 대로 은행이나 고리 사채에 손을 벌려야 하는 것이다.

지난 6월 중소기업청이 두 군데(서울 강북구 수유시장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 전통시장 상인 2백24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통계조사에서 모집단 전부를 조사하는 방법) 결과는 이를 잘 보여준다.

전통시장 상인의 약 30퍼센트가 1천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3백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고 답한 사람도 상인 전체의 절반이 넘는 1백15명이다. 또 부채 종류별로는 은행 등 금융권에서 돈을 빌렸거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사람(복수응답)이 9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에게서 돈을 빌렸다는 사람이 20명, 소위 '일수'라 불리는 고리 사채를 쓴다는 사람도 15명에 달했다.

이들이 최고 연이율 1백36.2퍼센트에 달하는 고리 사채를 쓰면서, 매달 수십 만원 안팎의 이자를 내는 이유는 일반 금융기관 대출을 엄두도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개 노점상이나 무등록 점포를 운영하는 이들의 신용등급은 8등급(최하 10등급) 이하인 경우가 많다.

무등록 사업자 · 노점상 등에도 문 활짝… 지원 사각지대 없애

정부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지난 6월 30일자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전통시장 소액대출 제도가 그것이다. 총사업비 1백50억원을 투자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전통시장 상인회에 소액서민금융재단이 최대 1억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지원해준다. 상인회는 이를 재원으로 하여 소속 상인들에게 최대 5백만원 이내로 금리 4퍼센트 수준으로 대출해준다. 현재 서울에만 14개구 24개 시장에서 실시 중이며 강원, 전북, 부산, 제주, 광주 등 6개 시도가 소액서민금융재단과 협약을 완료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돼 소속 상인들을 대상으로 '마켓론'이라는 이름의 소액대출 제도를 실시 중인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재래시장을 찾았다. 얼마 전 마켓론 5백만원을 대출받은 두부 판매점 사장 박진효 씨는 "마켓론이 있어 참 편리하다"고 말문을 뗐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간편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각종 서류 내야지, 심사하는 데 기다려야지… 문턱이 높아 제때 돈 쓰기가 어렵잖아요." 박 씨는 마켓론이 좋은 또 하나의 이유로 대출 상환의 편의성을 꼽았다.

시장 형편을 잘 아는 상인회가 대출 업무의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니 자신들의 형편과 편리에 맞게 '일수'로 돈을 갚아도 되고, 일주일 단위 혹은 한 달 단위로 돈을 갚아도 되니 편리하다는 설명이다.

대출방법은 간단하다. 상인회에 비치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점포가 있는 이들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무점포인 이들은 대출매매 표준계약서와 각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총 1백26개 점포가 있는 수유재래시장의 경우 현재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상인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수유시장 상인회 노춘호 회장은 "추석이 다가오면 대출 신청이 지금의 배로 뛸 거라 예상된다. 5천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이용도 증가에 따라 2차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특히 요즘은 노점상이나 무등록 점포 쪽으로 이 제도를 알리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어쩔 수 없이 고리 사채에 의존해왔던 무등록 사업자나 노점상 등의 저금리 채무로의 전환은 이 제도가 가진 또 하나의 순기능이다.

금융위원회 주홍민 사무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의 많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저리로 긴급 생업자금을 융통하게 되어 생활안정은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유시장 상인들은 정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전통시장 소액대출 제도를 크게 반기고 있다.

대기업이 동네 구석구석마다 대기업 슈퍼마켓(SSM)의 진입을 시도해 시끄러운 요즘이다. 경기침체 속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위한 소액대출은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금융 보호망이 되어줄 전망이다. G

글 · 정지연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소액서민금융재단 Tel 02_2084_7900 www.mif.or.kr
전국상인연합회 Tel 042_257_5183
중소기업청 시장개선과 Tel 043_481_4335

알아두세요!

지방 시장 상인 1000만원까지 대출

지방의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중소기업청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지방전통시장 소액희망대출 특례보증 제도도 눈여겨봄직하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 15개 시도 1백 개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규모는 3백억원이며 상인 1인당 최고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1백퍼센트 신용보증으로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4.5퍼센트(고정금리), 보증료율 1퍼센트다. 보증서가 발급되면 17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취급 은행들로부터 직접 대출이 가능하다. 경영개선자금 취급 은행은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시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과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등이다. 대출 자격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시장 상인회의 추천을 받으면 된다.

높은 은행 문턱, 함께 넘어드립니다

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청 소액신용대출 마련

서민 지원을 위한 금융제도가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할 때 사채나 대부업체 등을 통해 긴급자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 서민이나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은행 문을 두드려볼 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대안이 되는 셈이다. 서민들을 위한 신용대출, 잘 살펴보면 내게 맞는 제도를 찾을 수 있다.

소액신용 대출

"보통 담보 없이 창업자금을 빌리려면 사업운영계획서에 13시간 교육까지 절차가 까다로워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수월하게 대출받았죠."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제도를 이용해 1천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남상돈(45) 씨. 그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그의 식당을 찾은 기자에게 그간 준비했던 대출 서류뭉치들을 보여줬다. 남 씨는 12남매의 아버지로 언론을 통해 이미 많이 알려진 유명 인사이기도 하다.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지난해 10월 영등포로 이사한 남 씨는 영등포시장에 식당을 열면서 운영자금이 추가로 필요했다. 그는 영등포 신용보증재단을 찾아 교육을 받고 사업운영계획서도 작성했다. "잔뜩 준비한 서류들이 쓸모가 없었다"는 그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은행을 찾았을 때 대출받기가 쉬웠고, 그 돈이 식당 운영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물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40) 씨는 몇 달 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금융기관을 방문했으나 재단에서 듣고 알던 내용과 다른 점이 많아 당황했다고 한다. 이 씨는 결국 은행측이 제시하는 요건에 충족되지 못해 발길을 돌려야 했다.

남 씨는 저(低)신용 서민이나 영세자영업자에게 절실한 이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상환실적이나 창업 후 운영 등을 고려해서 대출금도 좀 더 올리고 분야도 세분화해 지원한다면 좋을 것 같다"며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남 씨가 이용한 소상공인 창업자금 외에도 정부가 운영 중인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이나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대출' 등은 정부가 기금을 마련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는 국가가 보증하고 운영하는 제도다.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최고 500만원까지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은 신용도가 낮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중소상인들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부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출 가능금액은 신용등급에 따라 3백만~5백만원.

그동안 자영업자는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거나 매출 범위 내

노점 상인들도 인근 상인이나 주민으로부터 영업 사실 확인을 받으면 무보증 소액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등 대출 조건이 까다로웠다. 그러나 지난해 세계적 금융위기 여파로 자영업자의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담보가 없고 매출 실적이 마이너스라도 5백만원까지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점포 없이 장사를 하는 노점상 등에게도 3백만원까지 대출 문은 열려 있다.

대출 및 보증 기간은 최대 5년. 상환 방법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상환 방법은 일시 또는 수시 모두 가능하다. 매월 납부 또는 정기 분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출 금리는 7.3퍼센트 이내로 다른 대출이나 사채 이용과 상관없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 향락 등 일부 유흥업종과 신용관리 정보 보유자, 신용회복 지원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 대출금을 연체 중인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

농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 6개 지방은행(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한 뒤 현장 실사를 통해 곧바로 대출받을 수 있다.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대출 신청 다음 날 입금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시장 상인들은 시장상인회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노점 행상 등은 인근의 상인과 아파트 부녀회, 통·반장의 사업사실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했으며, 지원 규모는 5천억원으로 한도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대출'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워 사채나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신용도가 낮은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제도다.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고 금융기관이 대출을 맡고 있다.

자격은 신용 6등급 이하로 보증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로 비정규직도 포함된다. 다만 신용 10등급과 급여 소득증명이 불가능한 비정규직, 신용관리정보 보유자, 신용회복 지원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 대출금을 연체 중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신용등급 6, 7등급 5백만원, 8등급 4백만원이며 9등급은 3백만원이다.

무담보로 가능하며 신용협동조합, 농협중앙회(지역농협 포함), 우리은행,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용보증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서류(소득금액 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급여 통장) 등이다.

발급 시 수수료에 해당하는 보증료는 타 보증의 절반 수준(대출금의 0.5퍼센트)이며 대출 금리는 연 8.4~8.9퍼센트 정도다. 상환 기간은 3년 또는 5년을 선택할 수 있으나 자영업자와 달리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보증 신청 당일이나 다음 날까지 신속히 대출을 해줘 긴급자

조영철 기자

중소기업청 지원 창업자금을 받아 식당을 운영 중인 남상돈 씨(맨 위)와 가족들.

금이 필요한 저신용 근로자들에게 편리한 제도"라는 것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대출 희망자들의 금융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보증서 발급 업무를 대행해주는 불법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신의 신용등급은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나 금융기관에서 대출 상담 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신협 지점이나 중소기업청 콜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이지론'이나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해드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G

글 · 강선임 객원기자

중소기업청 Tel **1357**
신용보증재단중앙회 Tel **1588-7936 www.신용보증해드림.kr**
한국이지론 www.egloan.co.kr

마이크로 크레디트 제도를 이용해 창업지원금을 마련한 함남규 · 장균이 씨 부부(왼쪽)와 이지은 씨(오른쪽 사진에서 맨 오른쪽). 이들은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새 출발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여보, 믿기지가 않아요"

무담보·무보증 대출, 서민 살린다

서민을 위한 소액대출 제도인 마이크로 크레디트가 국내에서 본격 시행된 지 5년째다.
정부 지원도 예전에 비해 크게 늘어 저소득층에게 마이크로 크레디트는 빈곤의 탈출구로 발돋움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창업자로 새 출발"

#1 "여보, 믿기지가 않아요!" 지난 3월 함남규(50) · 장균이(46) 씨 부부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마이크로 크레디트 제도에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린 끝에 1백2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창업지원금 2천만원을 받게 된 것이다. 덕분에 이젠 월소득 1백50만원가량을 올리는 작은 인쇄소의 사장 부부가 됐다.

한때 이들 부부는 잘나가는 광고회사를 운영할 정도로 잘살았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엄청난 빚을 떠안고 서울을 떠나 강원도 속초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둘째 아들이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담도폐색에 걸려 1년을 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시한부 선고까지 받았다. 다행히 주위의 도움으로 아들 수술비는 마련했지만 빚은 갚지 못해 생전 하지 않던 간판 일을 시작했다.

재기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돈은 쉽게 모이지 않았다. 남편 함 씨는 아내와 예전에 광고 전단지를 만들던 일을 생각하며 작은 가게를 내고 싶었다. 하지만 돈 한 푼 없는 이들 부부에게 선뜻 사업자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던 중 마이크로 크레디트 제도를 알게 됐고, 부부는 성심성의껏 창업 아이디어 계획서를 제출해 여러 번의 심사 끝에 창업지원금을 얻게 됐다. 남편 함 씨는 "아무에게도 돈을 빌릴 수 없던 내게 유일한 희망이 됐다"며 "앞으로 아내와 열심히 일하면서 바닥났던 통장에 잔고를 가득 채우고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에서도 벗어나고 싶다"고 말했다.

제도권 은행에서 금융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빈곤 · 저소득층에게 무담보, 무보증으로 소액을 대출해주는 제도인 마이크로 크레디트는 함 씨 부부처럼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새 출발의 발판이 되고 있다.

"전공 살려 옷가게 사장님 됐어요"

#2 올해 7월 창업지원금 2천만원을 받아 친구들과 여성의류 가게를 차린 이지은(37) 씨 역시 "가족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준 마이크로 크레디트 제도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2007년쯤 남편의 중고차 매매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근근이 생활비만 벌어가며 힘들게 살았다. 다행히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 제도를 알게 된 그는 대학 시절의 의상 전공을 살려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조그마한 옷가게를 얻을 수 있는 지원금을 마련했다. 이 씨는 "장사한 지 두 달 가까이 되는데 벌써 1천8백만원 정도 벌었다"면서 "마이크로 크레디트는 생명줄과 다름없다"며 만족해했다.

마이크로 크레디트

마이크로 크레디트 제도는 1976년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을 시작으로, 현재 세계 1백여 개국에 파급돼 시행 중이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반 은행이나 무조건적으로 돕는 자선·기부 단체와는 성격이 다르다. 저소득층에게 사업에 성공할 만한 아이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신용등급 7~10등급에 해당하는 저신용층은 7백20만명에 이른다. 전체 금융권 이용자 3천5백만명 중 약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치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고 대부업이나 사채 등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대면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듯 제도권 은행에서 금융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빈곤·저소득층을 위해 소액을 대출해주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제도는 2000년 민간단체 '신나는조합'에서 시작됐다. 이후 정부에서도 2005년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해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사업이 시작됐고, 이는 올해 '희망키움뱅크'라는 이름으로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에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설립했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올해 서울시가 희망드림뱅크 사업을 마련했다.

창업계획서 및 현장 평가 후 최대 2천만원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의 희망키움뱅크 지원 실적에 따르면 이제까지 공동체 2백여 군데와 5백30여 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봤다. 저신용자층의 상환율은 약 86~92퍼센트로 해마다 나아지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 소액서민금융재단의 지원으로 창업 및 신용회복을 한 사람은 약 6천8백여 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나 지자체가 벌이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제도는 사업 수행기관에 위탁해 운영된다. 신나는조합, 사회연대은행 등 여러 민간단체들이 맡고 있지만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다.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금융소외계층이거나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수입이 1백50만원 이하인 사람들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무담보, 무보증이 원칙이다. 대출 금액은 최대 2천만원이고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은 2~6퍼센트다. 대출금은 6개월 거치 후 54개월 동안 갚아나가게 된다.

대출 절차는 까다로운 편이지만 지원자는 많다. 적게는 10 대 1에서 많게는 1백 대 1 정도의 경쟁을 뚫어야 한다. 대출 신청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후 창업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실사 평가가 이뤄진다. 서류·현장심사를 통과하면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출금을 받아도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사업 수행기관에서 사업 진행 상황을 일일이 점검하기 때문이다. 신나는조합의 노영한 기획팀장은 "과거 마이크로 크레디트로 소액자금을 지원받아 재기에 성공한 분들이 새롭게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각종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신용대출은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서민들의 자활을 돕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먼저 저소득층의 창업과 신용회복 등을 위해 쓰이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 자금을 크게 늘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20억원이었던 지원금을 올해는 3백30억원으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백71억원이었던 지원금을 올해 4백4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또한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주축으로 산재해 있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추진 기구를 네트워크화할 계획이다. 전국 2백~3백 개의 사업 거점 센터를 만들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희망키움뱅크', 서울시의 '희망드림뱅크'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로 분산돼 있는 기관의 금융 전담반을 만들어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립투자지원과 원소윤 사무관은 "청년 구직자와 금융업계 퇴직자 등을 사회봉사인력으로 활용해 마이크로 크레디트 관련 기관에서 자활 컨설팅, 금융 멘터링 등 다양한 서민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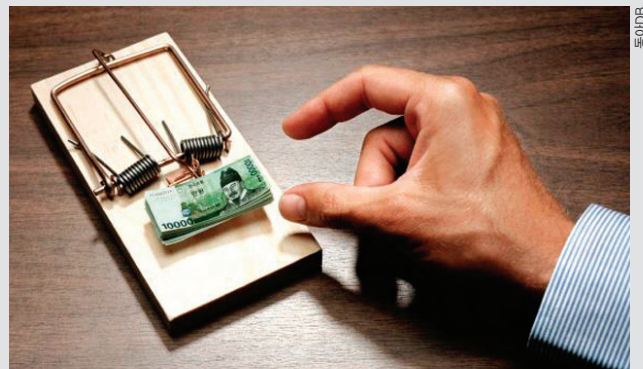
(2009년 6월 기준)

구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가족부	금융위원회 (소액서민금융재단)	서울시
사업명	희망키움뱅크 사업	금융서비스 취약계층 지원	희망드림뱅크 사업
대상	자활공동체 및 저소득 개인	저소득층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서울시 거주자 중 창업 희망 소재지가 서울인 저소득 개인 및 자활공동체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백50% 이하
금액	(개인) 2천만원 (자활공동체) 1억원	복지사업자별로 상이 (주로 5백만원 이내, 최대 2억원)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최대 2천만원
기간	6개월 거치 54개월 상환	복지사업자별로 상이 (주로 5년 이내)	6개월 거치 54개월 상환
금리	연 2%(고정금리)	연 2~6% 이내	연 2%
규모 (2009년)	3백30억원	4백40억원	60억원
사업수행기관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신나는조합, 나눔과기쁨,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	신용회복위원회, 한마음금융, 소상공인진흥원 등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열매나눔재단 등
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한마음금융콜센터 (1588-3570)	사회연대은행 (02-2274-9637)

고금리는 꼭 '환승론'으로 갈아타세요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된다면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대부업체의 채무로 고통 받고 있다면 연체채무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과 높은 이자를 낮은 이자로 바꿔주는 '전환대출'을 알아보자.

서울에 사는 주영희(가명 · 35) 씨는 지난해 11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6백만원을 빌렸다. 주 씨가 실제로 받은 돈은 선이자 60만원을 뺀 5백40만원. 대부업자는 주 씨의 통장을 맡아 보관하면서 이자 상환 명목으로 3백40만원을 인출했고, 직접 현금으로 받아 간 적도 여러 차례 있었다. 이뿐 아니라 대부업자는 주 씨가 근무하는 회사로도 여러 차례 돈을 갚으라는 전화를 해 다른 직원들이 주 씨의 채무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신체포기 각서'를 쓰라는 협박까지 해 견디다 못한 주 씨는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를 불법 이자 수취 및 불법 추심행위(대부업법 위반)로 경찰에 통보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동아DB

사금융 피해 구제

경기침체로 실직하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사람들이 늘면서 주 씨의 경우와 같은 사금융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는 올해 상반기에만 2천6백34건의 사금융 피해 상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천62건에 비해 27.7퍼센트나 늘었다. 금융감독원의 '불법대출중개수수료피해신고코너'에 접수된 1천1백4건을 포함하면 총 3천7백38건으로 81퍼센트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고금리 수취 및 불법 채권추심 관련 상담이 35퍼센트로 가장 많았으며, 고금리 수취의 99퍼센트는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불법 채권추심의 59퍼센트는 등록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 대부행위 69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생활정보지(43퍼센트)를 통해 알게 된 대부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박원형 유사금융조사팀장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사금융업체를 찾지 말고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119 사이트를 방문해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찾아보고,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대부업체 소재지의 시청 또는 도청에 확인해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사채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알고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 등록 대부업체는 연 49퍼센트, 미등록 사채업자는 연 30퍼센트가 법정 최고이자이므로 이를 초과한 이자는 불법이다. 또 빚을 갚으라고 폭행, 협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대신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거나 '강제집행착수통보서' '법적예고장' 등 법원에서 보낸 것처럼 가장하는 우편물을 발송해 채무자를 압박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박 팀장은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녹취를 하거나 촬영을 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사채업자를 만날 때는 혼자 만나지 말고 친구나 이웃 등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만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사채업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상담을 의뢰하거나 신고한다. 검찰과 경찰은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는 한편 불법 사채피해를 신고해 혐의자가 검거될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대부업체에 빚을 지고 있는 연체채무자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채무자가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면 최대 원금의 30%까지 감면받고 최장 3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것도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을 미끼로 작업비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말 것과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불법대출중개수수료피해신고코너나 각 금융협회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로 고통 받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환승론)'을 알아보자.

신용회복위원회는 올해 7월 13일부터 대부업체에 빚을 지고

있는 연체채무자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연체 기간이 5개월 이상 경과한 채무가 지원 대상이다. 해당 대부업체에 연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면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연체 기간이 12개월을 경과한 채권은 최대 원금의 30퍼센트까지 감면해 채무를 조정해준다. 조정된 채무는 최장 3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9월 2일 현재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예스캐피탈, 엔젤크레디트, 리드코프, 원캐싱, 웰릭스캐피탈, 오리온캐피탈 등 6개 업체.

신용회복위원회 홍보팀 김상길 선임조사역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업체를 계속 늘려나감으로써 좀 더 많은 대부업체 채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무조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23개 상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전환대출은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가 대부업체,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에서 3천만원 이하의 채무를 연 20퍼센트 이상의 금리로 상환하고 있을 때 이를 10퍼센트대로 낮출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용보증을 하는 제도다. 대부업체 채무는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지난해 12월 말 이전에 빌린 채무만 가능하고, 연체된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3천만원 이하 채무 금리 10%대로 낮출 수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 7월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환대출 제도에 대해 94.9퍼센트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84.2퍼센트가 '고금리대출 비용 경감'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 권기선 신용회복기금부장은 "대부업체의 40퍼센트 후반대에 이르는 높은 이자를 상환하다가 10퍼센트 내외로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환대출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전국 9개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천만원 이하 채무는 신용회복기금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시청이나 구청에서도 전환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서민·금융소외자지원협약'을 맺어 시청이나 구청 민원실에 '서민금융종합상담창구'를 운영키로 하고, 8월 31일 경기 고양시와 첫 번째 협약을 체결했다. 종합상담창구는 앞으로 서울 영등포구, 경북 구미, 충남 당진, 전북 군산 등 전국 18개 시구청 민원실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부업체의 이자를 낮춰 좀 더 적극적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 40퍼센트대의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낮추기 위해 등록 대부업체가 자산유동화증권(ABS·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대출자산 및 부동산, 어음 등 보유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을 발행하거나 대출자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도록 허용하고, 대부업체가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대출재원으로 쓸 때 낮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은행과 약정을 맺게 할 계획이다.

동아DB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기금에서는 서민들의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조성목 서민금융지원 총괄팀장은 "이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연 13~15퍼센트인 대부업체의 조달금리가 한 자릿수로 낮아져 대출 금리도 인하될 것"이라며 "대부업체가 저금리로 자금을 끌어와 고금리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조건을 부과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9월 정기국회에서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법정 이자율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심의된다. 현재 국회에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을 낮추고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G

글 · 이혜련 기자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19 **s119.fss.or.kr**
사금융피해상담센터 Tel **02_3145_8655~8**
불법대출중개수수료피해신고 Tel **02_3145_8530**
신용회복위원회 Tel **1600_5500 www.ccrs.or.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Tel **1588_1288 www.c2af.or.kr**

제때 돈 못 갚는 사람 600만명의 홀로서기 돕기

연체 3개월 미만도 워크아웃 가능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신용불량의 늪'에 빠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홀로서기를 돕는 각종 제도들이 많다.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될 위험에 처한 이들은 채무조정을 도와주는 신용회복 제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서울 중구의 회사원 이모 씨는 3년 전에 시작한 주식 투자 때문에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됐다. 동료들을 따라 주식에 손댄 그는 석 달 내내 평균 20퍼센트 이상의 수익을 내자 자신감을 갖고 5백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에 나섰다. 하지만 주가는 이내 바닥을 쳤다. '원금' 생각 때문에 신용카드, 은행 등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한 게 화근이었다. 결국 빚만 5천여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던 중 제2금융권에서 어렵게 돈을 빌려 투자한 사업마저 망하면서 빚은 금세 1억원으로 불어났다. 치매를 앓는 어머니의 병 간호와 생활고, 잦은 채권추심에 지친 그는 결국 사채에까지 손을 뻗었고, 결국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어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을 두드려야만 했다.

신용회복 지원 올 들어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 상담을 신청한 사람은 8월 말 현재 42만8천3백20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만1천1백13명에 비해 무려 63퍼센트가 늘었다. 이 중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은 6만5천8백95명. 이 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중호 홍보팀장은 "상담 사례를 보면 가장의 실직 후 생계를 위해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면서 파산상태로 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빚을 진 이들이라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서, 앞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해 연체가 장기화하는 것을 막는 것이 좋다. 프리워크아웃 제도 대상자가 되면 5억원 이하 채무에 대해 연체이자는 면제하고, 대출이자는 감면해주기 때문이다. 무담보 대출은 최장 10년, 담보 대출은 최장 20년에 걸쳐 갚으면 된다.

워크아웃 개시 즉시 연체 정보 해제·보증인 채권추심 불가

만약 연체 기간이 3개월을 넘었다면 이미 금융채무불이행자다. 이들은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워크아웃은 5억원 이하의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으면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가 되면 이자를 전액 면제받고 원금도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남은 채무는 최장 8년에 걸쳐 나눠 갚으면 된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는 즉시 연체 정보가 해제되고 보증인에 대

한 채권추심도 할 수 없다. 원금탕감은 없다. 원금의 일부라도 갚는 것이 워크아웃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또 워크아웃 제도로는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에 대한 조정도 불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사단법인으로, 금융사와 협약을 맺고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도록 요청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대다수 대부업체가 협약을 맺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법적으로 강제성도 없어 최근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채무구제 프로그램으로도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담보 대출 10억원, 무담보 대출 5억원 이하의 채무자이면서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개인회생은 법원이 책정한 생계비를 뺀 일정액을 5년간 매달 납부하는 제도다. 법원이 정한 만큼의 돈을 5년 동안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되는 제도이므로 지속적인 급여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의 경우 성실히 부채를 상환하고 나면 지속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개인 신용도 회복할 기회를 갖게 된다.

개인회생 신청 후 5년 갚으면 나머지 채무 면제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고 법원이 모든 빚을 탕감해버리는 것이다. 가장 확실하게 빚에서 해방될 수 있지만 이후 금융활동에 있어서 사회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 요즘 더욱 문제되는 것은 파산브로커들의 존재다. "법원을 이용하면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꼬드겨 채무자들로 하여금 개인파산을 하도록 만들고 브로커비를 챙기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성표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들은 법원 신청자들과 달리 자기 능력껏 돈을 갚으려는 사람들"이라며 "이들로 하여금 파산을 신청하도록 부추기는 환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특히 법무부가 지난 7월 개인회생 채무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주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채무자들이 의도적으로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개인회생으로 몰리는 모럴 해저드(Moral Hazard)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영철 기자

이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원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나 신용회복기금 같은 민간기구에서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하는 '사전상담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해놓은 상태다.

8월 31일 '신용회복 프로그램과 서민 신용대출'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Risk&Reward 컨설팅의 김춘경 대표는 "우리나라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들은 평균 40퍼센트의 상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 7년간 우리나라의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상당히 성공을 거뒀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채무조정이 꼭 연체자에게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신용이 나빠지기 전에, 연체가 되기 전에 채무자를 돕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체 유무보다 대출자의 신용위험에 따라 대응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다.

현재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금융인구는 6백만명이나 된다. 경제인구 2천5백만명 중 4명에 1명꼴로 제대로 된 금융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정부와 금융계가 내놓고 있는 다양한 구제 프로그램을 보완해 그들이 다시 경제현장에서 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G

글 · 정지연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신용회복위원회 Tel 1600-5500 www.ccrs.or.kr

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개인파산 비교

구분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 주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대상 채권	협약가입 금융기관 보유채권(3600개)	협약가입 금융기관 보유채권(3600개)	제한 없음(사채 포함)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 범위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제한 없음
대상 채무자	3개월 미만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	과다채무자인 봉급생활자, 영업소득자	파산원인
보증인에 대한 효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채무조정 수준	무담보채권 최장 10년, 담보채권 최장 20년, 신청일 기준 연체이자 감면	변제 기간 8년 이내, 이자채권 전액 감면,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1/2까지 감면	변제 기간 5년 이내,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클 것	청산 후 면책
법적 효력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 완료 시 면책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 완료 시 면책	변제 완료 시 법적 면책	청산 후 법적 면책

정경택 기자

가까운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외계층 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장애 있다고 안 되고… 비싸서 못 하고…

정부는 장애인·아동 등 소외계층과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성' 금융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다. 예전부터 시행됐지만 그냥 지나쳤던 서민을 위해 알짜배기 정책들을 모았다.

1 장애인 전용 보험
보험료 싸고 소득공제 추가 혜택까지

경북 포항에 사는 이학수(가명·40) 씨는 2년 전 교통사고로 한 팔을 잃었다. 당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이 씨는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하던 일도 그만둬야 했다. 비장애인으로 살 때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느낀 이 씨는 보험에 가입하고 싶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서 "장애인은 보험 가입이 안 된다"는 말을 들은 터라 답답하기만 했다.

이 씨와 같은 장애인들도 보험에 들 수 있다. 장애인 전용 보험이 지난 2001년부터 개인보험, 자동차보험, 단체상해보험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보험회사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감액하는 등의 차별을 한다면 범법 행위로 간주된다.

장애인 전용 보험은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고 세금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 씨와 같은 40세 남성이 보장액 5백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가 2만1천1백원이다. 일반보험 보험료보다 30퍼센트가량 저렴하다. 또 보장성보험에 대한 소득공제 외에 별도로 연간 1백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망 보험금등에 대해서도 연간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 등 이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생명보험협회 klia.or.kr **손해보험협회** knia.or.kr

2 아동 소액보험
5%만 내면 나머지는 재단에서 부담

5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노점상을 하는 박애리(가명·39) 씨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민수(가명·7)가 걱정이다. 아들이 혼자 놀다가 며칠 전 동네 좁은 비탈길에서 교통사고까지 당할 뻔했던 일을 생각하면 박 씨는 지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다. 박 씨는 아들을 위해 보험을 들고 싶지만 빠듯한 살림살이를 생각하면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포기해버렸다.

민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보험사업이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올해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사업 규모는 총 35억원으로, 수혜 대상자가 전체 보험료의 5퍼센트만 지불하면 나머지는 재단이 지급한다. 또 전국 16개 시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보험회사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소액보험 협약을 체결해 전국의 저소득층 아이들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동 소액보험은 3년 만기의 보장성보험(일시납)인 '빈곤아동보험'으로 시중 보험회사가 운용한다. 빈곤아동보험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의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의 만 0~12세 아동이 가입할 수 있으며, 수혜자는 총보험료(평균 1백4만원)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5만2천원만 부담하면 3년간 후유장애, 입원 급여 등의 보험서비스를 받게 된다. 아울러 미래설계자금으로 3년간 30만원씩 모두 90만원(30만원×3년)을 지급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추천을 받아 소액보험에 가입된 수혜 대상 아동은 올 8월까지 1천9백여 명이다.

소액서민금융재단 02-2084-7900, mif.or.kr

3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원
최대 1천만원 3% 금리로 저리 융자

경기도에 사는 김성수(가명·48) 씨는 카센터를 운영하다 지난해 문을 닫았다. 김 씨는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없고 생활비와 아이 병원비까지 감당할 수 없자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고 지난달 1천만원을 대출받았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원을 받은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원사업은 재산은 있지만 수입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신빈곤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주택, 건물,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 재산이 2억원 이하이고 가구원 전체 소득(4인 가족 기준)이 1백32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융자한도는 1천만원까지다. 대출 금리는 연 3퍼센트로 저렴하다. 시행 초기에는 융자금을 매달 나눠 받았지만 지금은 일시불 수령도 가능하다. 대출신청자가 1천만원을 일시에 받으면 2년 동안 월 2만5천원의 이자를 내다가 이후 5년간 월 약 18만원의 원리금을 갚아나가면 된다.

소액서민금융재단 제공

지난 7월 강원도와 소액서민금융재단이 아동 소액보험 협약을 체결했다. 강원도를 포함한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소액보험 사업을 지원한다.

대출을 받으려면 올 12월 19일까지 신분증과 임대차보증금 계약서 사본 등을 새마을금고, 신협 등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 대출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한다.

보건복지가족부 129

4 국민연금
추가보험료 신청 10년 채우면 연금 지급

대구에 사는 오상준(가명·57) 씨는 날이 갈수록 노후 걱정에 시름이 커져갔다. 모아둔 돈은 많지 않은 데다 국민연금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1백20개월) 이상 납부해야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오 씨는 92회만 납부했을 뿐이어서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다. 만 60세가 되면 오 씨는 지금까지 불입한 국민연금 원금에 이자를 더한 액수를 일시불로 돌려받게 된다. 목돈이긴 하지만 노후에 나눠 쓰기엔 작은 액수다. 오 씨는 젊었을 때 어떻게든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채워놓을 걸 하는 후회가 강하게 들었다.

오 씨처럼 개인 사정으로 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노후에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추납보험료를 신청해 만 60세 이전에 최소 납입기간인 10년을 채우면 된다.

평균수명 79세까지 노후를 대비한다면 일시불로 돌려받는 것보다 추납보험료를 신청해 부족한 연금기간을 채우고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평균수명까지 매달 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합이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연금액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지원실 김기애 차장은 "연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생길 때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G

국민연금공단 1355, nps.or.kr

글 · 김민지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신용회복 지원 고객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등 '희망 가꾸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왼쪽 세번째가 이철휘 사장.

신용회복기금 설립 이철휘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신용회복 될 때까지 지속 관리"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이하 캠코)는 금융·기업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해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높이는 경제안전망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에 못지않게 역점을 두고 있는 또 하나의 역할이 개인 신용회복 지원이다. 지금까지 100만명이 캠코의 지원을 통해 제2의 삶을 살고 있다.

이철휘 사장은 지난해 9월 신용회복기금을 설립해 7만명에게 혜택을 주는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계경제가 따뜻하고 서민경제가 활성화돼야 국가경제 기반도 단단해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다.

"일시적으로 낙오된 금융소외계층이 다시 재기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금융소외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돕는 것은 캠코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가경제의 기반인 가계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캠코의 역량을 더욱 집중시킬 계획입니다."

신용회복기금의 취지 및 운영 현황에 대해 들려주십시오.

과거의 신용회복 지원 제도가 일회성이었다면 신용회복기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금융소외자를 관리하고 도와 정상적인 금융거래자로 회복시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저신용층이 고금리 부담 때문에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전환대출을 통해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이미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었다면 채무 재조정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며, 새희망네트워크를 통해 각종 취업·복지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돕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어떤 제도입니까.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을 통해 한숨 돌린 분들이 생활고로 다시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아 고금리와 연체의 멍에를 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캠코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학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의료비, 전세자금 등 긴급생활자금을 5백만원까지 5년 한도 내에서 저리로 대출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용회복 지원 고객을 대상으로 '희망 가꾸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희망 가꾸기 캠페인은 신용회복 지원을 받으신 1백만명의 고객과 소통하고, 생활이 어려운 고객들께 도움을 드려 희망을 나누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캠코는 올해 8월 말에 채용한 1백명의 청년인턴 중 50명을 신용회복 고객의 자녀로 채용했습니다. 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 밖에 고객가족 여행 보내기, 아동 적성검사, 통학용 자전거 제공, 장애인 복지용품 후원 등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도움을 드릴 계획입니다. 고객들과 캠코는 비록 '빚' 문제로 인연을 맺었지만 고객가정에 자그마한 행복의 경험을 드려 '희망의 빛'을 심어준 캠코로 고객의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G

글 · 최호열 기자

“빚을 갚기 어렵다면 클릭해보자”

‘새희망네트워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정보 제공

돈 때문에 고생하는 서민이라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새희망네트워크’와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클릭해보자. 이곳에서 누구나 알기 쉽고,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환대출, 채무재조정…. 전문지식이 없는 서민이나 영세자영업자들에겐 낯설고 어려운 단어들이다. 그러다 보니 과중한 빚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더라도 정부나 국가기관으로부터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럴 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새희망네트워크’와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사이트를 방문해보자. 궁금한 사항에 대해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이 돼 있고, 개인별로 원하는 해결책을 맞춤형으로 제시해준다.

새희망네트워크는 서민금융 정보와 관련한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소외자의 자활을 지원하는 종합안내 시스템이다. 전환대출,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채무상담, 자활지원, 마이크로 크레디트 창업자금 안내,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안내, 취업 및 창업 지원, 소액대출, 복지지원 등 총 7백25개 기관의 정보를 망라하고 있다.

본인의 거주지역과 채무, 소득, 취업희망 직종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채무조정 및 일자리, 복지 등 필요한 정보를 일괄 검색할 수 있다. 개인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는 셈이다. 예컨대 채무조정을 원할 경우 국내의 모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비교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제시해준다. 몇몇 기관은 사이트 내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생계비, 학자금, 임차보증금 등의 대출과 지원 내용을 거주지역, 계층별(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여부 등)로 정리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보를 안내해준다. 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하는 본인의 신용평가 등급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은 서민들이 법률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놓은 법률정보 서비스 사이트다. 궁금한 사항을 키워드로 검색해도 원하는 정보를 상세하게 얻을 수 있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어도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이곳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금전거래, 가압류, 가처분 등 금융과 관련한 알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 이용’을 검색하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금전대출을 받을 때의 유의사항 등이 자세히 나온다. 대부업체의 선택, 계약서 작성요령, 약정이자의 문제, 기한 전 상환, 채무조정 프로그램, 불법 채권추심 및 대처요령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곁들여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한 금전채무와 관련해 채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단도 꼼꼼하게 소개하고 있다. G

글 · 최호열 기자

새희망네트워크 Tel **1588-1288 www.hopenet.or.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moleg.go.kr

조영철 기자

새희망네트워크 홈페이지(왼쪽),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오른쪽).
새희망네트워크 상담창구에서 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위).

우리나라 경기가 급속도로 회복되고 있지만 서민과 영세업자, 중소기업의 경기회복 체감지수는 낮다. 사진은 8월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취업박람회.

조세정책은 올 상반기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중요한 '무기'가 돼줬다. 지난해 9월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경제회복이 상대적으로 늦어질 것으로 예견됐으나 최근 몇 달 사이 한국의 경이로운 회복력을 평가하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피치가 9월 2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올린 것도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부각된 한국 경제의 위기극복 능력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 재정 확대를 기조로 한 조세정책에 힘입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 0.4퍼센트였던 것이 3분기 0.2퍼센트, 4분기 -5.1퍼센트까지 떨어졌다가 올 1분기 0.1퍼센트로 회복됐고 2분기 2.3퍼센트 성장을 기록했다. 경기회복에 기여한 조세정책의 한 예로 노후차 세제지원을 들 수 있다. 노후차 세제지원은 2분기 경제성장률의 0.8퍼센트 포인트를 견인했다. 또 지방 골프장에 대한 세제지원은 해외로 나가던 골프인구를 불러들여 내수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생안정 중점… 취약계층 지원 확대

그러나 경제지표의 빠른 개선과 더불어 영세자영업자의 폐업이 증가하는 등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취약계층의 고용 부진이 이어지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만7천명이 감소했다. 또 전국 가구의 실질소득과 소비가 3분기 연속 동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8월 28일 발표된 '2009년 2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물가상승을 감안한 올 2분기 전국 가구(2인 이상)의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은 2백92만8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퍼센트 감소했다. 올 2분기 실질소비는 1백85만2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퍼센트 줄었다. 감소 속도 자체는 둔화되고 있지만 실질 소득과 소비가 동반 감소한 것은 지난해 4분기 이래 3분기째다.

내년 세제 어떻게 바뀌나

서민 감세·세원 확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모순(矛盾)은 서로 맞서는 창과 방패다. 감세와 증세 역시 맞선 구도다. 정부가 발표한 '2009 세제개편안'은 서민, 자영업자 등에 대한 감세와 고소득자, 대기업 등에 대한 과세 확대 정책을 담고 있다.
언뜻 보면 모순 같지만 '민생안정'과 '지속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올 연말까지 예상되는 재정적자 규모가 5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올해의 재정과 조세정책은 △경기회복의 체감 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서민과 중산층을 배려하면서도 △성장동력을 끌어올려 일자리를 유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두 개의 축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

기획재정부가 8월 24일 발표한 '2009 세제개편안'은 바로 이 같은 기조 속에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減稅)와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대한 증세(增稅) 방안이 합쳐진 것이다.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이번 세제개편안은 무엇보다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어 추진된다. 경기침체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계획대로 인하하고 개인과 기업이 내는 세금을 낮추는 대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특정 계층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여 전 국민이 골고루 세금을 낼 수 있는 조세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내년까지 사업을 재개하는 영세사업자에게는 결손처분한 체납세금 5백만원까지 납부를 면제해주는 등 사업이나 취업에 재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하게 된다. 소형주택 월세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등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또 중소기업에는 모든 국세를 최대 5백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지방에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2012년 말까지에서 2015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한다.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기부도 기부금 손비로 인정하고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는 등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둘째, '지속성장'을 목표로 하여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투자하는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비용의 2퍼센트(중소기업은 30퍼센트)를 세금에서 감해주고 녹색펀드와 예금, 채권에 투자하고 받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친환경 녹색세제(Green Tax System)'를 도입한다.

고소득층·대기업에 주던 각종 특례 비과세 축소

셋째, '과세 정상화'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등의 과표가 양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과 입시학원, 결혼식장 등 자영업자 등에 대해 30만원 이상 거래 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며 상가 임대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이 임대소득 현황 파악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건전 재정'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례제도를 중심으로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한다. 또 금융 관련 과세제도를 정비하며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등 재정 건전성 회복 노력을 병행하게 된다.

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2012년까지 3년간 모두 10조5천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나는 세 부담은 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정부의 분류방식에 따르면 세수 증가분 10조5천억원 가운데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은 8조4천억원(79.6퍼센트)이며 나머지 2조1천억원(20.4퍼센트)은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부담이다.

OECD 기준으로 볼 때는 고소득자와 대기업 부담이 9조5천억원(90.6퍼센트),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1조원(9.4퍼센트)으로 분석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세원 발굴은 대부분 자금 사정이 넉넉한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통해 이뤄지는 셈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김낙회 조세기획관은 "세금을 낮추고 고루 내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다. 많은 선진국이 세율을 낮추는 대신 세금은 골고루 내는 방향으로 조세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계획대로 인하하고, 개인과 기업이 내는 세금을 낮추는 대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특정 계층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여 전 국민이 골고루 세금을 낼 수 있는 조세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

글·박경아 기자

조영철 기자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선진국형 조세개혁이다.

자영업 폐업 시 체납세금 최고 500만원까지 면제

결손처분 소득세 · 부가세 납부의무 소멸 등 자영업자 살리기 집중

기획재정부가 8월 24일 발표한 2009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영세자영업자 지원이다.
특히 폐업한 영세자영업자가 재기하는 데 세금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여건을 마련해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5백만원까지 결손처분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치로 40만명의 영세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불닭집을 운영했던 나영세(가명 · 42) 씨는 조류인플루엔자에다 경기한파까지 겹쳐 올해 초 결국 가게 문을 닫았다. 사업을 정리하고 보니 세금 낼 돈조차 없어 체납세금이 1천1백만원이나 쌓였다. 국세청에서는 나 씨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고 1천1백만원을 결손처분(납세 의무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 부과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처분)한 뒤 나 씨를 5년간 체납자로 분류해놓았다. 이 때문에 나 씨는 '체납 딱지'가 붙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고 금융권 대출을 받아도 결손처분 금액만큼 국가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음식점을 다시 차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최근 나 씨는 영세자영업자의 결손처분된 체납세금을 면제해준다는 세제개편안을 접하고 희망을 갖게 됐다. 정부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을 내년부터 최대 5백만원까지 털어주기로 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도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나 씨가 내년 말까지 새로 창업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면 체납세금 가운데 6백만원만 남게 된다.

사업자의 사업 활동 지원과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사업자등록 및 정정신고, 휴·폐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처리 기간도 단축돼 상호 변경의 경우 당일 처리가 가능하며, 사업 종류의 변경 또는 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는 '3일내 처리'로 단축된다.

또한 정부가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범위를 5백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으므로, 6백만원의 체납세금이 남게 되는 나 씨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나 씨는 금융권 대출 심사에서 체납정보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나 씨는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를 통해 2천만원을 대출받아 장사를 하면서 6백만원의 체납세금을 갚아나갈 생각이다.

기획재정부가 8월 24일 발표한 '친(親)서민 세제지원 방안'은 이처럼 주로 근로자에 중심을 두었던 예년의 세제개편안과는 달리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김낙회 조세기획관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가 재기하는 데 세금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백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켜주기로 했다.

500만원 이하 체납자 정보는 은행권 비공개

현재는 결손처분 후 5년간 체납자로 분류되며, 만약 이 기간에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세금 징수가 재개된다. 따라서 폐업한 영세자영업자가 다시 장사를 하기 위해 마이크로 크레디트 등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압류가 된다. 이렇다 보니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폐단이 존재했다.

정부는 이번 결손처분 세금의 징수 면제로 약 40만명의 영세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그 대상도 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 이하(소득률 12퍼센트가 적용되는 음식점의 경우 연간 소득 2천4백만원 수준)의 영세개인사업자로 한정했다. 또 세무서장에게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한 날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신청일 현재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제공 범위를 5백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금융기관에 등록되는 체납자 수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체납정보 제공 체납자 수가 연간 45만명에서 7만명으로 38

일러스트 · 채홍석

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체납액이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에 속해 이미 체납정보가 제공된 사람들도 개정 내용에 따라 해제 통보할 예정이다. 이 조치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체납세금은 원금부터 갚아나가도록 해 체납세금 납부 부담을 완화했다. 세금을 체납할 경우 처음에는 3퍼센트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다달이 1.2퍼센트씩(72퍼센트 한도) 가산금이 불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산금만 갚다가 정작 본세를 덜어내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체납세금을 납부할 때 이자부터 갚아야 했기 때문에 원금이 줄어들지 않아 고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성실 사업자에는 의료비 · 교육비 등 소득공제 3년 연장

소규모 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기간을 최대 18개월간 늦춰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도, 재해, 질병 등의 사유로 가산금을 내지 않고 세금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간이 소규모 성실 사업자에 한해 현행 9개월에서 18개월로 2배로 늘어난다. 소규모 성실 사업자란 복식장부를 사용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서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도소매는 3억원, 제조업은 1억 5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를 말한다.

아울러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일 경우엔 부가가치세율을 3퍼센트로 적용받을 수 있다. 원래 내년부터 음식·숙박업은 매출액에 4퍼센트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2년간 더 연장해주기로 한 것이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의 경우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다음연도 1월 말에, 지급명세서는 2월 말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바꿔 연말정산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간편장부 대상자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를 말한다.

복식장부 사용,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등록, 사업용 계좌 개설 등 성실 사업자 요건이 되면 가족들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의료비, 교육비 공제는 성실 사업자에 한해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나 이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업자등록도 편해졌다. 내년부터는 굳이 사업장이 있는 관할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되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의 사업 활동 지원과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사업자등록 및 정정신고, 휴·폐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관할 세무서에서만 업무를 처리해줬다.

아울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처리 기간도 단축돼 상호 변경의 경우 당일 처리가 가능하며, 사업 종류의 변경 또는 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는 '7일내 처리'에서 '3일내 처리'로 단축된다. G

글 · 이혜련 기자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첫걸음은 '성실 납세'

고소득층 세제 혜택 줄이고 상습·고액 탈세범 처벌 강화

작가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에서 로마 귀족들이 자비(自費)로 세운 로마 시내 대형 건축물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었다고 말한다. 현대적 개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첫걸음, 그것은 바로 납세다. 고소득자들의 성실 납세는 선진사회를 위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백만원이지만 현금을 내면 80만원에 하실 수 있어요." 서울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A(34)씨는 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성형수술비를 현금으로 내면 10~30퍼센트 할인해주겠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그리고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는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했다.

현금과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A씨는 무려 1백32억원의 소득 탈루를 저질렀다. 또 피부과, 치과 등과 협진시스템을 구축해 8개 병원을 직접 운영했지만 고용의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놓아 양성적인 소득금액도 여러 명에게 분산시킴으로써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는 편법을 썼다.

한의사 B(45)씨가 운영하는 서울의 한 한의원은 자체 개발한 한방치료제의 약효가 뛰어나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에서 환자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 일부 환자들은 돈을 보낸 다음 한방 치료제만 택배로 배달받기도 했다. B씨는 환자들이 내는 비보험 진료비 가운데 현금이나 무통장 입금을 통해 받은 진료비를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해 모두 32억원을 탈루했다.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세금 안 내고 버티기' 많아

이들의 탈루 사실은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병·의원 등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 1백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드러났다. 결국 A씨는 탈루소득 1백32억원에 대한 소득세 34억원을 추징당했고 고의적인 세금 포탈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고발됐

동아DB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30만원 이상 거래 시 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된다.

다. B씨도 탈루소득 32억원에 대해 소득세 17억원을 추징당했고 고의적 포탈에 대해 포탈세액 상당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결국 이들은 탈루 소득을 숨기려다 더 큰 손실을 입게 됐다.

'세금과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세금은 누구나 내는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인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버티는 사람이 적지 않다.

지난해 11월의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도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43.3퍼센트에 달했다. 최근 국세청의 기획세무조사 결과 연도별 소득 탈루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56.9퍼센트, 2006년 49.7퍼센트, 2007년 47퍼센트로 감소 추세에 있긴 하다. 하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관계 부처의 분석이다.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 오상훈 사무관은 "여전히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가 절반 가까운 소득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투명 지갑'이라 불릴 정도로 소득이 그대로 드러나는 근로소득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국세청의 지난해 11월 조사에서 신고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업종이 입시학원, 치과, 웨딩 관련 업종 등이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하고 '과세 그물망'을 촘촘히 하면서 기존 세제 혜택을 줄이는 내용을 2009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켰다.

30만원 이상 서비스 제공 시 영수증 발급 의무화

이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는 30만원 이상의 서비스 제공 시 무조건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즉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15개 전문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4개 의료전문직 △입시학원, 골프장, 예식장, 장례식장 등 4개 업종은 30만원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되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영수증 미발급 금액만큼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를 어긴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퍼센트를 정부가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세(稅)파라치' 제도가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위반사실 신고자는 신상정보 비밀 유지 등 법의 보호를 받게 되며 건당 3백만원, 연간 1천5백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각종 근로소득세 혜택도 줄어든다. 먼저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약 16만명)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혜택이 폐지된다. 근로소득 공제율도 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낮추고, 8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인 경우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줄어든다.

동아DB

고소득 전문직과 입시학원, 골프장 등 자영업자의 영수증 미발행을 감시하는 '세(稅)파라치' 제도가 내년 도입된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 포착 시스템과 세무자료 제출 시스템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기존의 변호사 소송 수임자료 외에도 보석과 영장기각, 구속취소 등 법률 자문과 관련한 다른 과세자료들이 법원에서 국세청으로 통보된다. 세무사나 변리사 등이 참여한 행정심판 자료 역시 조세심판원, 특허심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세무당국으로 통보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또 고소득 전문직의 수입금액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도 지금의 0.5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오른다.

상습·고액 탈세범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조세 포탈의 상습성 정도, 포탈세액의 규모, 납부세액 대비 포탈세액 비율 등에 따라 처벌이 차등화된다.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범은 해당 형(刑)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

특히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물론 뇌물을 준 사람에게도 뇌물액의 1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이 탈세를 조장하거나 지시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이던 벌금이 1천만원 이하로 인상된다.

대기업의 법인세 납부도 강화된다. 중소기업과 과표 1백억원 이하 기업은 당초대로 최저한세율이 인하(8→7퍼센트, 11→10퍼센트)되지만 과표 1백억원 초과기업은 2008년 수준으로 환원(14→13퍼센트)되고, 1천억원 초과 기업은 2008년 이전 수준(15퍼센트)으로 환원된다. G

글 · 박경아 기자

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대상 직종·업종

업 종	세부 업종
전문직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등 15개 전문직 (7개 업종은 추후 시행령 제정 때 결정)
의료 관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단, 의료보험 적용 진료거래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기타	입시학원, 골프장, 예식장, 장례식장

일러스트 · 남동윤

월세도 소득공제 취약계층 고통 분담

농어민·노인 등에 선별적 세제 지원 확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 근로자, 농어민,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1 근로자 A씨는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3천만원 이하의 연봉을 받고 있다. 아내, 자녀와 함께 국민주택 규모(85제곱미터 이하)보다 작은 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A씨는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무주택 근로자가 대출받은 전세대출금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해주면서 왜 월세 거주자에게는 그런 혜택을 주지 않을까" 하고 아쉬워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A씨도 월세 지급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 항목을 신설한 덕분이다.

공제 혜택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만 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전체 근로자의 70퍼센트 수준인 9백30만명에 이른다. 공제액수는 월세 지급액의 40퍼센트까지이며, 연간 공제한도도 전세대출금 상환액과 같은 3백만원이다.

#2 근로자 B씨는 올해 6월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 그동안 무주택 가구주이면서도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던 데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는 이른바 '만능청약통장'이라기에 한 달에 10만원씩 불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B씨처럼 무주택 가구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청약저축처럼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소득공제 허용액수는 불입액(연간 1백20만원 한도)의 40퍼센트로 최대 48만원이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은행에 주민등록등본과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주택 확인서는 은행에 비치돼 있다.

다만 B씨가 나중에 국민주택 규모(85제곱미터 이하)보다 큰 집에 당첨되면 그동안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청약저축처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세제 혜택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미래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저소득 근로자,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세제 지원이 늘어난다. 경기침체 여파로 임금이 줄고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우선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앞서 소개한 월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외에도 '자녀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등의 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어린 자녀에게 지급되는 보육수당은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받는 보육수당(월 10만원 한도)에 한해 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까지 보육수당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월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외에도 자녀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등의 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시한도 2년 연장된다.

농어민을 살리기 위한 세제 지원도 다양하게 추진된다. 현행 법규는 농어업인이 올해 12월 31일까지 농지, 초지, 양식어업용 부동산을 영농·영어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현물 출자한 경우에만 양도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업회사법인에 현물 출자해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이 제도의 적용 시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농어민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시한도 올해 말에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아울러 영농·영어조합법인의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도 올해 말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늘린다.

도서지역 면세유 3년 연장… 희귀병 부가세 면제 추가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용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도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된다. 현재 면제 적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돼 있지만 섬 주민의 생활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바뀐다. 덕분에 마라도 등 총 74개 도서가 3년 더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일종인 '노인복지주택'의 종부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복지시설을 말한다.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도 혈소판 감소 치료제, X염색체 유전자 이상(로렌조오일병) 치료제, 혈우병 치료제 외에 7가지가 추가된다. 이번에 포함된 희귀병 치료제는 보행장애 치료제, 구리 배설 촉진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치료제, 삼킴장애 제거제, 임파구 수치 증가 치료제, 성장 지연 치료제, 탄수화물 분해효소 결핍 치료제다.

이 7가지 희귀병 환자 수는 2008년 12월 기준으로 6천여 명에 이르며, 치료제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환자 1인당 연간 약 50만원의 치료비 절감 효과를 얻게 된다.

또한 정부는 취약계층을 돕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소액서민금융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의 손비 인정(경비 인정) 한도를 현행 소득금액의 5퍼센트(개인은 2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지난해 금융기관들이 2천7백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기관으로, 휴면예금 출연금을 재원으로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마이크로크레디트(금융소외자를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동아DB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으로 민간 사회복지시설에도 도움의 손길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법인이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동네에 있는 아동상담소, 아동양육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숙인 쉼터 등에도 기부의 손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경우에만 기부금을 법인 소득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회복지시설도 손비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현재는 사회복지, 장학, 학술, 문화예술단체 등에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에 대해 개인은 소득금액의 15퍼센트, 법인은 소득금액의 5퍼센트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근로자도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과 같이 5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배정훈 사무관은 "올해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기부금에 세제 혜택을 많이 주었다는 특징이 있다"며 "취약계층 지원 체계를 정부의 직접 지원에서 민간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한 간접 지원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G

글·김지영 기자

월세도 소득공제 된다
택수(Tax-u)의 tax 이야기
선배님, 여기...
오, 땡큐~
태수야, 빨리 집 장만해야지. 언제까지 월세생활 할 거냐?
아 예. 이제 취업에 성공했으니 열심히 돈 모아서 마눌님이랑 딸내미 고생 안 시켜야죠.
돈 벌어와!
그래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들어놨어요. 헤헤. 청약자격도 받는 데다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대요.
월세도 소득공제 된다는데?
예? 정말요?
푸훕
소형주택(전용 85㎡이하) 월세의 40%를 소득공제 해주잖아. 부양가족이 있고,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면 돼.
하나 더 좋은 소식 알려줄까?
뭔데요?
팔랑 팔랑
장마도 연장된단다~
아 예~ 우산 안 가져왔는데.
웬 장마?
그 장마가 아니라 은행의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 말이야. 저소득층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비과세 혜택을 3년 연장하기로 했지~
여보~ 장마 연장된대~
뭔 소리야, 해가 쨍쨍 한데~
씁쓸한 이 누구라...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패자부활 돕는다
택수(Tax-u)의 tax 이야기
이 근처에 유명한 치킨집이 있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근데 장사 안 하세요?
어~그 백수 선생.
500원 어치만 배달해 주세요.
백수가 아니라 택수예요. 지금은 취업했어요~
성공했구려~. 나도 3년 전 잘나갔지~
후다닭 치킨
바글 바글
조류인플루엔자에 경기한파로 파리만 날리더니...
후다닭 치킨
지금은 폐업하고, 세금도 못 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경기가 살아난다는데...다시 일어서고 싶어도, 체납세금 때문에 사업자등록도 안 되고, 은행에서 대출도 어려워~
딱히 뾰족한 수가 없을까?
있죠!
걱정 마세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체납세금을 500만원까지 소멸해주어 패자 부활을 돕는다는군요. 같이 세무서로 가시죠.
세무서
처분할 재산도 없어서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450만원이 결손처분됐군요. 5년간 체납자로 분류되는데...
그렇지만 걱정 마세요.. 내년까지는 납부의무가 없어져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도 체납세금으로 내지 않아도 돼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다시 가게를 개업했다!
코스닭 치킨
사장님~ 500원에 닭다리 하나 주세요~

세금 없는 녹색펀드 가입할까?
택수(Tax-수)의 tax 이야기
기집애. 집 너무 좋다 얘~
얘~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
와~ 무슨 재테크하세요?
재테크라기보단 세테크라고 해주세요~
세테크?
청약통장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기본인 거 아시죠?
그럼요~장마!! 벌써 가입해 놨죠. 40%가 소득공제 되는 주택청약종합 저축도 들어놨어요.
그 정도 갖고 뭘…
펀드수익
펀드 투자도 했는데, 수익률도 괜찮고 세제혜택도 있어서 짭짤했죠~
어머~ 얘~ 좋은 펀드 있으면 추천 좀 해봐라~
응?
콕콕
녹색펀드에 가입해보는 건 어때? 배당소득 비과세에다 소득공제까지 되더라.
완전 '꿩 먹고 닭 먹고다 얘~
닭이 아니라 알이겠지, 여보~
세테크 팁 하나 더~ 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대. 이전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혜택이 주어졌는데, 만 6세가 되는 해 연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대.
뛰는 집값에다 높은 보육비 부담에 설사가상이었는데, 다행이다.
설사가 아니라 '설상' ~
여보, 다 적었어?
우리도 집에 가는 대로 통장에 녹색칠하자!
녹색펀드
O.K!

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안 떼어 주면 큰일 날걸!
택수(Tax-U)의 tax 이야기
임플란트 하셨네요? 133만원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비싸요?
그러게요. 좀 비싸네요.
카드 되죠?
가맹점 등록이 안 돼서... 현금 주세요.
아니~ 요즘 카드 안 되는 곳이 어디 있어요?
OO카드
그러게요. 그런 데가 있나 보네요.
세상물정을 모르네….
세금계산서 떼어주세요.
어떻게 하죠. 준비가 안 됐는데...
발끈
카드도 안 된다, 세금계산서도 안 끊어주겠다~ 뉴스 못 들으셨나 보네요?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의무예요.
위반하면 전액을 과태료로 내야 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은 그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요~!!
아니, 왜 우리 병원만 가지고 그러세요.
천만에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과 입시학원, 예식장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고소득 전문직에서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발붙일 곳이 없어질 거예요.
세금계산서 여기 있어요~
진작 그럴 것이지~
OO병원

탤런트 박용식(63) 씨가 가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지난 5월 당시 의정부지방법원장이었던 최은수 현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의 인연 때문이다. 의정부지역의 고등학교 동문 모임 자리에서 가사조정위원 활동을 권유받은 박 씨는 마침 이전부터 봉사활동 기회를 찾고 있던 터라 학교 후배인 최 법원장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대학 시절인 1967년 TBC 공채로 입사했으니 42년 동안 배우로 살아왔죠. 너무 오랫동안 외길을 걸어온 데다 연기란 본래 남의 인생을 사는 것이니 이제 남을 위해 봉사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회용 이벤트식 봉사는 싫었고, 가슴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가사조정위원이라면 가능할 것 같았어요."

가정이야말로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여긴 박 씨는 그때부터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사조정 활동을 시작했다. 지금도 적성에 딱 맞아 자부심을 느낀다고 한다. 그는 올해 상반기에만도 2백 건이 넘는 이혼조정에 참여했고, 매주 두 차례씩 의정부지법을 방문한다.

"굴곡진 인생을 살면서 얻은 결론이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한 가정이 붕괴돼 파국을 맞는 것보다 비극적인 일은 없거든요. 이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원리 원칙을 따지는 법의 잣대보다 비참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따뜻한 가슴이 필요합니다."

박 씨는 가사조정위원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은 마음을 열고 속에 쌓아뒀던 이야기를 하염없이 토해내며 눈물을 쏟는다. 특히 얼굴이 알려진 배우라서 법정에 찾아온 사람들이 편하게 속내를 털어놓는 장점도 있다.

"돈 받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그들을 도닥여줘요. 그러면 그들도 굳게 닫았던 마음의 빗장을 열더라고요."

그는 이혼 사건의 소장도 꼼꼼히 읽는다. 하나같이 기구하고 복잡한 사연뿐이라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미어진다고 한다.

"이혼소송을 치르다 보면 당사자인 양쪽 모두 굉장한 정

의정부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 탤런트 박용식

"TV에는 신구 씨가, 의정부에는 제가 있습니다"

탤런트 박용식 씨가 법원 가사조정위원으로 이혼조정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다른 조정위원들보다 이혼조정 성공률이 높기로 유명하다. 비결은 42년간 배우로 살면서 몸에 밴 감정이입과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따뜻한 가슴이다.

신적 고통을 받아요. 보통 80~90퍼센트가 저보다 연하인데, 요즘은 여든이 넘어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도 많아요."

박 씨는 가사조정 과정에서 어떤 부부에게든 "구관이 명관이다" "참을 인(忍)자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고 말하며 재결합할 것을 권한다. 그러면 순간적 충동에서 찾아온 사람들은 대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재결합을 한다. 하지만 상처가 곪을 대로 곪은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권유가 통하지 않는데, 그럴 때는 '지혜롭게 교통정리를 하는' 역을 맡을 수밖에 없단다.

박 씨의 가사조정 경험에 따르면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문제로 생기는 갈등이다.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했더라도 극심한 생활고에 빠지면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적지 않다는 것.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혼사유는 성격 차이고, 세 번째가 남자의 폭행이나 음주, 폭언 같은 것인데 이 역시도 생활고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고부 갈등이나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헤어지는 부부도 적지 않죠."

박 씨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타인의 문제를 받아들이되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인생선배로 다가가 대화… 화해하고 돌아가면 보람 느껴"

"가사조정이 있는 날 딱 둘을 앉혀놓고 한 10분 이야기해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감이 와요. 심리전을 파악해야 하죠. 제가 수사관 같기도 해요. 고도의 심리 테스트에서 진실과 허위를 가리는 작업 말입니다. 이때는 언변과 설득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꾸짖는 자리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대화가 우선입니다."

그가 가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파국 직전의 부부가 화해하고 좋은 모습으로 법원을 나설 때다. 그때 그는 "말로 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낀다"고 했다.

결혼식 주례도 자주 맡는 박 씨는 부부의 화목이 곧 자식 농사와 연결되며 세상에서 가장 중차대한 일이라고 믿는다.

"저도 37년 동안 결혼생활을 했는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가정과 자식 농사더란 말입니다. 이혼은 부부 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니까요. 잘 클 수 있는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잘못된다면 그건 전적으로 부모 책임이에요. 아이들에게 부모가 잘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교육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박 씨는 1남 2녀의 아버지다. 그리고 항상 그의 기를 살려주는 한 여자의 남편이기도 하다. 그가 5, 6공화국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닮았다는 이유로 방송활동이 금지되고 연기활동에 좌절을 겪을 때도 가족은 늘 그의 든든한 후원자가 돼주었다. 그것은 방송 출연 제의가 뜸해진 요즘도 마찬가지다.

"원로 연기자가 되면 방송 출연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 줄 알았는데 '급격히' 줄더군요. 그 때문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배우라는 직업이 어려운 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계속 선택받아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캐스팅 여부도 출연 직전에 뒤바뀌는 일이 허다하고요. 연예계의 허와 실을 모두 경험해서 자식들에게는 제때 월급 받고 정년이 보장되는 인생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박 씨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금기시한 연예계 일을 하고 있다. 큰아들은 영화기획사의 투자제작팀장이고, 둘째는 KBS 공채 31기 출신의 프리랜서 성우로 활동 중이다. 셋째 또한 중앙대 영화과 졸업을 앞두고 있다. 더욱이 박 씨의 부인까지 자녀들 편에 섰다.

탤런트 박용식 씨는 의정부지방법원의 가사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의 재결합을 독려하고 있다.

> **그가 가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파국 직전의 부부가 화해하고 좋은 모습으로 법원을 나설 때다. 그때 그는 "말로 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낀다"고 했다.**

"아내는 당신도 어릴 때 부모가 말렸던 것을 했으면서 왜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며 다그치곤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라고 독려하죠. 저는 보수적인데, 아내가 심하게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성격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매력이고요(웃음)."

박 씨는 힘겹게 연기활동을 하면서도 지금껏 긍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가족 덕분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가사조정에 임할 때마다 타인의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슴에 새긴다. 또 가사조정을 하며 온몸으로 느끼고 깨달은 바를 연기로 승화시킬 생각이다. G

글 · 변인숙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메뉴 수백 번 시식… 중국인 입맛 사로잡아”

중국서 매출 80억원 비빔밥 체인점 온대성 대표

한국 전통의 비빔밥으로 중국인 입맛을 사로잡은 온대성 베이징온가찬음유한공사(北京溫家餐飮有限公司) 대표. 중국을 사랑하는 한류(韓流) 사업가로서 한식 세계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그의 비결을 들었다.

온대성 대표는 비빔밥 전문점에 이어 중국 최초의 한국 떡볶이 전문점도 열었다.

‘The world's 4 most delicious dishes are Cavier, Truffle, Foie gras and Jeonju Bibimbab(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 4가지는 캐비어, 트러플(송로버섯), 푸아그라(거위 간)와 전주비빔밥이다).’

온대성(47) 베이징온가찬음유한공사(北京溫家餐飮有限公司) 대표의 명함 앞면에 새겨진 문구다. 세계적인 요리로 손꼽히는 캐비어, 송로버섯, 거위 간과 함께 전주비빔밥을 세계 4대 요리의 하나로 만들겠다는 온 대표의 각오를 담았다. 그는 명함을 건넬 때마다 궁금해하는 중국인들에게 꼭 설명을 해준다.

이처럼 온 대표가 전주비빔밥에 대해 애착을 갖는 이유는 자신이 베이징에서 운영하는 비빔밥 전문점인 ‘대장금’ 때문이다. 대장금은 2006년 2월 베이징 중심인 쭝관춘(中關村)에 연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12호점을 열었을 만큼 베이징 현지에서는 한국음식을 대표하는 음식점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온 대표도 스스로 지난해 베이징올림픽 때 현지에서 재중대한체육회 한국 선수단 지원단장을 맡는 등 성공한 사업가로 평가받는다.

온 대표의 중국과의 인연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두산그룹 베이징 지사장으로 중국에 건너온 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기 직전 두산그룹이 만든 한국음식점 ‘수복성’의 대표를 맡았다. 이때부터 한국 음식문화와 본격적인 인연을 맺었다. 수복성은 2003년 외국계 식당으로는 미국 TGI프라이데이스에 이어 두 번째로 ‘국가 특급식당’으로 등재될 만큼 성공을 거뒀다.

수복성의 성공을 바탕으로 온 대표가 눈을 돌린 품목은 바로 전주비빔밥. 중국시장에 가장 적합한 메뉴이면서 한식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메뉴로 비빔밥을 선택했다.

“불고기, 갈비, 잡채, 떡볶이 등 한식으로 세계화할 수 있는 메뉴는 많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인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메뉴로 비빔밥을 택했습니다. 다양한 재료가 포함돼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에 무난하기 때문입니다.”

메뉴가 정해진 다음에는 브랜드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다. ‘대장금’ 드라마가 중국에서 방영하기 전이었지만, 성공 가능성을 내다보고 중국 현지에서 상표 등록했다. 예상대로 대장금 드라마는 중국 현지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2006년 7월 중국 현지에서 열린 미식대회의 수상 경력도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 음식점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베이징에서 열린 제4회 세계미식대회에서 ‘전주비빔밥 골동반’으로 개인전 최우수상과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당시 대회에는 차이나월드샹그릴라 호텔 등 베이징 유수의 호텔과 음식점 조리부가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온 대표는 중국인 입맛에 맞는 비빔밥 맛을 찾는 일에도 철저했다. 50가지의 비빔밥 메뉴를 선정해 중국인 1백명에게 맛 테스트를 거친 후 10가지를 배제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다섯 번의 맛 테스트를 거친 후 최종으로 비빔밥 10가지를 개발했다. 메뉴 선정에만 1년 반이 소요됐다. 이후 승승장구를 거듭해 현재는 12개 점포의 연 매출이 80억원에 이른다.

‘사스 공포’ 김치 마케팅에 활용 ‘현지화 공략’ 적중

온 대표가 말하는 사업 성공 비결은 무엇보다 철저한 현지화와 고객 중심 경영이다. 흔한 신문·TV광고 대신 그 비용을 한식을 알리는 각종 문화행사나 이벤트에 투자하고 있다. 비빔밥 비비기 행사나 대장금 선발대회, 난타 공연, 태권도 시범단 공연 등을 지원하며 한국 문화와 음식을 소개했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SARS) 공포가 중국 전역을 휩쓸던 당시 베이징 거리에는 문을 연 식당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한국행을 택한 대부분의 사업가들과 달리 온 대표는 현지에 남아 사스 예방 효과가 있다고 소문난 한국

2007년 5월 중국 최대 IT상가인 쭝관춘의 미식행사에 참가한 '대장금'은 2007인분의 대형 비빔밥 비비기 행사를 마련해 큰 인기를 끌었다.

김치를 담가 중국인들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사스 공포를 '김치' 마케팅에 활용한 것이다. 60일간 직원들과 매일 김치를 180여 킬로그램씩 담가 총 30톤 이상을 중국인들에게 나눠줬다.

"당시의 어려움이 오히려 한식과 한국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됐어요. 개인적으로도 주변 중국인들에게 정말로 중국을 사랑하는 친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기회가 됐습니다."

중국인 직원들과 고객에 대한 배려도 세심하다. 중국인 직원들과는 수시로 단합대회를 여는 것은 물론 우수 직원을 선발해 한국으로 연수를 보내 업무 능력을 높인다. 처음 식당을 시작했을 때는 중국 직원들이 쉽게 일하고 서비스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매뉴얼로 만들었다. 음식 조리 과정은 물론 설거지 법, 재떨이 놓는 방법, 고객 응대법까지 자세히 제시했다.

음식이나 서비스에 불만을 표시하는 고객들에게도 최선을 다한다. 온 대표가 들려주는 일화 한 가지. "한 여자 손님의 옷에 직원이 간장소스를 엎질렀어요. 고객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알아 보니 북경의 고급 호텔인 왕푸징 호텔에서 구입한 옷이더군요. 고객이 왕푸징 호텔에서 세탁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호텔 측에선 투숙객이 아니면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요. 부랴부랴 제 아내를 그 호텔에 투숙시켜 옷을 세탁했습니다. 물론 그 고객은 화를 풀었죠."

지난 7월에는 중국 최초의 한국 떡볶이 전문점도 차렸다. '온가 1호'는 중국 젊은이들이 많이 오가는 시단(西單) 거리에 개업했다. 온 대표는 비빔밥과 떡볶이 등 한식 세계화에 앞장선 점을 인정받아 농촌진흥청의 해외명예홍보대사로도 위촉됐다. G

글 · 김병수(매경이코노미 기자)

온대성 씨가 말하는 중국에서의 사업 성공 비결

- 중국인을 사랑하라
- 모든 업무를 매뉴얼로 만들어라
-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노동법을 공부하라
- 중국인을 상대로 판매하라
- 중국시장에 대한 지식과 명확한 사업 개념을 선정하라
- 제품뿐 아니라 한국 문화도 같이 판매하라

'1백원회'를 이끄는 김희만 씨(왼쪽)는 독거노인들을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나눔 활동을 벌이고 있다.

'1백원회' 김희만 씨의 이웃돕기

"선뜻 건넨 100원이 벼랑끝 이웃 살려요"

요즘 1백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나 봉사단체 '1백원회'를 이끄는 김희만 씨는 "1백원씩만 모아도 누군가를 도우며 살 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게 1백원의 소중한 기부 이야기를 들었다.

"1백원으로는 과자도 살 수 없고, 지하철도 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처럼 매일 꾸준히 모으면 1백원들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어요."

아이들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1백원짜리 동전을 모아 묵묵히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만들어진 광주광역시의 봉사단체 '1백원회'다. 이 단체는 당시 광주광역시 풍암·금호동사무소 동장으로 근무하던 김희만(62) 씨의 생각에서 시작됐다.

"가난한 홀어머니가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에게 고기를 먹이고 싶은 마음에 쇠고기를 훔치다 쇠고랑을 찼다는 신문기사를 읽었어요. 어떻게 하면 벼랑 끝에 내몰린 이웃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 책상 서랍 안에서 쓸모없이 뒹굴던 1백원짜리 동전들이 생각났어요."

김 씨는 곧장 생활정보지에 '하루 1백원으로 불우이웃을 도울 분을 찾는다'는 한 줄 광고를 냈다. 한 사람 두 사람 동참자가 생겼다. 이듬해인 1999년 4월 김 씨를 주축으로 광주에 사는 60여 명의 회원들이 매일 1백원 모으기를 약속하며 1백원회를 창립했다.

이들에게 '얼마를 내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 매달 일정액을 통장으로 자동이체하기도 하고 주머니 사정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몇천원씩 송금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지금까지 저소득층 학생 7백42명에게 장학금으로 1억1백55만원을 지원했고, 불우이웃 의료비와 생활비 등으로 1천3백여만원을 기부했다. 돌볼 가족이 마땅치 않은 홀로 사는 노인 5백85명에게는 영정(影幀)을 만들어주는 활동도 벌였다.

풀뿌리 기부문화 국민 모두에 전파되길…

현재 회원은 6백50여 명으로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아홉 살 초등학생부터 여든다섯 살 할머니까지 연령층도 다양하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최연소 회원인 변세민(9) 양은 어머니가 딸의 출생을 기념해 회원으로 등록시켰는데 할아버지를 포함한 가족 6명 모두 1백원회 회원이다. 어려운 형편에도 폐지나 빈병을 모아 판 돈으로 매달 3천원 안팎의 기부금을 꼬박꼬박 내는 회원도 있다.

1백원회를 이끄는 김 씨도 기부금 모으기에 열심이다. 2007년 공직에서 퇴직한 그는 1톤 트럭을 장만해 틈만 나면 폐지나 빈병, 재활용품 등을 수집해 팔아 후원금을 마련한다. 그는 동장 시절에도 틈만 나면 깡통을 주우러 다녀 '깡통 동장'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금액과 기부 방식보다는 '하루 1백원'이라는 정성이 중요하다는 김 씨는 "풀뿌리 기부문화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사랑의 메아리로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

글 · 장선욱(국민일보 사회2부 기자)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생활공감정책으로 서민생활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제안한 작은 아이디어가 정책이 되는
새로운 차원의 소통이 실현됩니다.

국민임대주택에 중증 장애인 우선 임대

"어디로 이사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정부에서
우선 임대해 준다니 정말 고맙더라구요"

– 인천 서구에 사는 김창래 님 제안 정책

초등학교 1,2학년생의 등하교 상황을 부모에게 SMS로 통보

"아이가 학교에 잘 도착했는지
몇 시에 하교했는지 문자로 보내주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 대구에서 맞벌이를 하는 김완섭 님 제안 정책

전통시장 소액대출 시범사업

"요즘 처럼 장사하기 어려울 때
담보없이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팀 제안 정책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빛나는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십시오.

www.oklife.go.kr

국민 여러분이 제안한 생활공감 주요정책

경제 분야

- 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세(9~30만원) 면제
-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 전통시장 영세상인 5백만원까지 연 4.5% 대출
-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분양권 등기제도 개선
- 생계형 음식점 개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7~30만원) 면제
- 영세운송사업자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
- 모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
- 동네 수퍼마켓 위생교육기관 일원화

교육 • 복지 분야

- 초등 1~2학년 등하교 상황 부모에게 SMS 알림
- 저소득층 자녀 학비신청 증빙서류 제출 폐지
- 이동전화 요금감면(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원스톱 서비스
- 아동 필수예방접종(8종) 비용 30% 지원
- 국민임대주택에 중증 장애인 우선 임대

사회 • 안전 분야

- 민통선 출입증 발급기간 단축(60일→20일)
- 영세민 거주지역 300평 내외 동네마당 조성(88개소)
- 주민등록증 택배서비스
- 경차택시 및 여성전용택시 운행
-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재입국시 허가절차 폐지
- 생업을 위해 간단한 조사는 전화로 진술
- 마트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 지급
- 1회용 종이컵 회수시스템 구축 자원재활용
- 공익근무요원 야간대학 수학 허용

• 기획재정부 • 농림수산식품부 • 금융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국방부 • 보건복지가족부
• 국토해양부 • 교육과학기술부 • 법무부 • 환경부 • 병무청 • 국세청 • 중소기업청

위기의 여성들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희망을 드립니다

여성부 '새로 일하기 센터' 직업교육에서 취업까지 한 번에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을 '워킹 푸어(Working Poor)'라고 한다.
불황이 지속되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다. 여성부는 이들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안정적인 삶을 되찾아주는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 가정의 행복을 찾아주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3남매를 둔 정민선(40) 씨는 2년 전만 해도 간판 일을 하는 남편 수입으로 먹고사는 데 큰 부족함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침체로 남편 일거리가 줄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졌다.

정 씨는 식비라도 벌기 위해 치킨집 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한 달 내내 일해도 30만원 벌기가 힘들었다. 어느새 월세는 3개월 이상 연체됐고, 도시가스도 끊겨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끼니를 해결해야만 했다. 아이들의 급식비, 교재비, 학원비 등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정 씨는 취업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벌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하지만 막내를 출산한 뒤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 치아가 빠지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일자리를 얻기가 힘들었다.

정 씨는 주변 사람을 통해 여성부가 운영하는 '여성 경제위기 대책추진단'을 알게 돼 도움을 청했다. 이곳의 도움으로 틀니 시술 및 잇몸 치료를 받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 또한 여성부 직원들이 월급을 쪼개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보수월액기부 대상자'에 선정돼 생활비 일부도 지원받았다. 하지만 더 큰 도움은 따로 있었다. 여성부가 지원하는 '새일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얻은 것이다.

"취업적성검사와 직업교육을 받은 뒤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어요. 어엿한 어린이집 급식조리사가 되었답니다."

서울 목동의 한 어린이집에 취업한 정 씨는 매일 아이들이 먹을 50인분의 간식거리와 점심 식사를 준비한다. 처음에는 낯설고 쉽지 않은 일에 허둥댔지만 이제는 자신이 차려주는 음식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해 퇴근시간까지 늦춰가며 아이들이 좋아할 메뉴를 고민하는 등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다.

정민선 씨는 "여성부의 새일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얻게 돼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다"고 말했다.

정 씨가 새 일자리를 통해 안정을 찾은 지도 두 달이 지났다. 집안 분위기도 확 달라졌다.

"아이들도 제가 하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엄마, 오늘은 어떤 것을 만들어줬어요?' '맛있다고 해요?' 하고 묻기도 하고요. 처음 만드는 어려운 메뉴는 큰아이가 인터넷을 통해 레시피를 찾아주기도 한답니다. 거기다 가끔씩 남편이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지' 하며 저녁 식사를 차려줄 땐 정말 행복해요."

정 씨는 요즘 1주일에 한 번씩 요리학원에 다닌다.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노력하는 그를 위해 새일센터는 학원비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정 씨는 "생활비 걱정을 덜게 된 점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가족과 함께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생겨서 좋다"고 말했다.

15년 전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던 장숙경(45) 씨도 새일센터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했다. 그는 4개월간 전산세무회계 등 취업교육을 받은 후 현재 경기 시흥시 오이도 정보화마을에서 프로그램 관리자로 일하고 있다.

장 씨는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좋지만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더 행복하다"며 "앞으로 오이도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싶다"고 말했다.

주부인턴제 및 취업연계 서비스 제공

새일센터는 이처럼 여성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직업교육과 함께 일자리 알선,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한다. 현재 전국에 72개소가 설치돼 있다. 구직을 원하는 여성들은 새일센터에 배치된 전문 직업상담원과의 개별 직업상담을 통해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과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교육훈련과정이 끝난 후에는 직장 적응을 돕는 주부인턴제나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취업 후에도 직장 적응에 문제는 없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준다.

새일센터가 개설한 교육훈련과정을 밟으려면 전국 각 지역 새일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훈련생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여성가장, 결혼 이주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교육생에게는 2~4개월가량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 한 달 약 10만원의 교통비와 식비가 지급된다. 또한 육아부담이 있는 교육생은 보육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교육훈련과정으로 뷰티스타일리스트, 전산세무회계 실무전문가, 쇼핑몰운영 전문가, 급식조리사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준비돼 있다. 특히 취업매니저 양성과정, 세무실무전문가 과정, 청소년진로설계사 과정, 텔레마케터 과정 등 경력단절 여성들의 특성을 고려한 과정들도 포함되어 있다.

8월 말부터 진행 중인 서울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모습.
이처럼 새일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들은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새일센터로 직접 찾아올 형편이 되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구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경우 매주 수요일 신도림역 2번 출구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직업상담, 교육상담, 구인상담 등 취업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G

글 · 김성주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 훈련과정 프로그램

기관명	과정명	연락처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초등영어! How Teaching! 뷰티(스킨 & 네일)스타일리스트	02-886-9523~5
금천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컨설턴트	02-858-4514~5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피부케어전문가 급식조리사	02-867-4456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전산세무회계 실무전문가 쇼핑몰운영 전문가	02-921-2020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원무경영관리사 커리어컨설턴트	02-581-4433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체험학습강사, 취업매니저	02-3409-1947~9
마포신촌여성인력개발센터	학습 코칭을 통한 교과매니저 웨딩플래너	02-332-8661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병원고객서비스 전문가 영어놀이지도사	02-980-2377~8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공예강사 및 파티스타일리스트 방과후 아동지도사	02-2692-4549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역사문화체험지도사 청소년진로설계사	02-972-5506

동아DB

앞으로 짠맛 센서를 이용해 음식을 만들면 염분 농도를 낮춘 식사가 가능해진다.

짜게 먹지 말라는데… 간을 아예 안 할 수도 없고…

"이젠 식사 전에 짠맛 재보세요"

짠 음식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짠 정도를 수치로 잴 수 없어 얼마나 짠 음식을 섭취하고 있는지 알기는 어렵다. 농촌진흥청은 짠맛을 좋아하는 우리 국민의 염분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음식의 짠 정도를 수치로 알려주는 '짠맛 센서'를 개발했다.

짠맛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통적인 입맛이다. 한국인이 통상 맛있다고 느끼는 국물의 염분 농도는 1퍼센트 정도다. 일반적으로 국 한 그릇이 3백 밀리리터 양이므로 한 끼 식사로 3그램의 소금을 섭취하는 셈이다. 이렇게 하루 세 끼를 먹다 보면 9그램 정도의 소금을 섭취하게 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 5그램을 웃도는 수치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도하게 소금을 먹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소금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고혈압, 위암, 뇌졸중, 골다공증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특히 고혈압의 경우 80퍼센트 정도가 짜게 먹는 식습관에서 비롯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과도한 염분 섭취를 줄일 수 있는 휴대용 '음식 짠맛 센서'를 개발했다. 짠맛 센서는 국물에 포함된 소금의 양을 측정한다. 센서에 나온 국물의 염분 농도를 0.3퍼센트 이하로 조정하면 지나친 염분 섭취를 피할 수 있다.

짠맛 센서는 음식물의 염분 농도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어 식습관 개선에 도움이 된다.

짠맛 센서는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체온계와 모양이 비슷하다. 두께 1.2센티미터, 폭 2.2센티미터, 길이 13센티미터의 간편한 포켓형으로 휴대성이 고려된 것이 특징이다. 조리할 때나 음식을 먹을 때 국에 짠맛 센서의 측정부를 0.5센티미터 정도 담그면 2, 3초 후 국물의 염분 농도를 바로 알려준다.

짠맛 센서는 국물에 녹아 있는 소금의 0.1~2.5퍼센트 범위 내 염분 농도를 전류의 변화량으로 측정해 짠맛 수치를 측정한다. 소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점에 착안해 만들어진 것이다. 섭씨 10도부터 80도까지 온도 측정이 가능한 이 센서는 원하는 염분 농도 측정도 가능하다. 사용 전 미리 원하는 염분 농도를 설정해두면 그 수치와 대비해 짠맛 센서에 내장된 발광다이오드(LED)에 염분 농도가 높을 경우 빨간불이, 낮으면 녹색 불이 들어온다.

원하는 염분 농도 설정 가능… 휴대까지 가능

지난 7월 특허 출원된 이 기술은 9월부터 병원에서 고혈압 환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저염 식이요법 등을 통해 그 효과를 분석한 뒤 오는 11월 산업체로 이전해 실용화할 계획이다. 짠맛 센서의 판매 예상가격은 2만5천원선이다.

농촌진흥청 윤홍선 수확후처리품질과장은 "식습관을 개선해 국민 건강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센서를 개발했다"며 "앞으로 국민 식생활에서 염분의 양을 줄이는 데 짠맛 센서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농촌진흥청 Tel 031-299-2429 rda.go.kr

자동차 사고 피해 청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한 장으로 OK!

저소득가정 구성원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해왔으나 최대 6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8월 28일부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한 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동아DB

자동차 사고를 당한 저소득층 가정에서 좀 더 쉽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일용직 노동자 A씨. 임대아파트에서 고령의 아버지와 함께 어렵게 살고 있는 그에게 얼마 전 청천벽력 같은 일이 닥쳤다. 아버지가 폐지를 모으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A씨는 생계를 위해 일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병 수발에다 경찰서를 오가느라 큰 고통을 겪었다. 뒤늦게 A씨는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지원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신청하려 했지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갖춰야 할 서류가 대여섯 개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이들 가족 구성원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 사고 당사자 및 가족들에게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장학금, 생활자금 대출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제출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 A씨의 경우처럼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도 A씨는 나은 편에 속한다. 저소득층 가정 대부분은 장애인 가족이거나 할머니(혹은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로 이뤄진 조손(祖孫)가정, 심지어 정신지체장애를 지닌 부모와 어린 자녀로 이뤄진 가정이 적지 않다. 이들 중 한 사람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복잡한 서류를 구비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가 주위의 도움 없이 세무서와 관공서 등을 돌아다니며 서류를 갖추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8월 28일부터 중증후유장애로 거동이 힘든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사고피해자 등 지원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피해자가 제출해야 하는 생활형편 증명 서류를 간소화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저소득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 증명 2종, 재산 증명 4종 중 최소 2종 이상을 제출해야 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중증후유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원 대상자들은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데 큰 불편과 부담을 안고 있었다.

팩스로 공단끼리 서류 접수… 직접 오갈 필요 없어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한 가지만 제출해도 생활형편 증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직접 찾아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동의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직접 팩스 송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서류 제출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동일 가구에 신청자가 한 명 이상일 경우 각각의 신청자마다 같은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토록 했던 규정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동일 연도 내에는 가족 중 한 명만 지원심사를 통과하면 나머지 가족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김예린 사무관은 "기존의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팩스를 통한 서류 송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청자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돼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 제도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

글 · 최철호 객원기자

묶음포장 가격 그대로 2% 마일리지 적립… 그린 마일리지

“묶음포장 없애자” 기업도 소비자도 환영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제품 판촉용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그린 마일리지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 업체로서는 비용을 줄이면서 환경 지키기에도 참여하는 일이고, 소비자로서는 그린 마일리지도 받고 쓰레기 분리수거의 번거로움까지 더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

제품 포장재를 줄이는 생산·유통업체의 노력이 소비자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다.

대형마트의 출현과 함께 판촉용 포장재(묶음판매상품 또는 프로모션 패키지를 싸는 포장재의 총칭)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다. 판촉용 포장재는 세제류, 식품류, 제과류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연간 약 6천2백 톤(2006년 기준)에 달하는 포장폐기물이 발생하고 기업의 포장 비용으로 약 8백30억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소비 행태일 뿐 아니라 불필요한 환경유해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품의 실질적 기능과는 아무 상관없이 외형을 중시하는 소비문화와 업체의 교묘한 판매전략이 빚어낸 기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판촉용 포장재는 소비자가 매장에서 제품을 산 뒤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거나 소비자들이 아예 매장에서 포장재를 뜯어내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의 주범인 판촉용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 30일 건강·미용 제품을 제조 유통하는 18개 업체가 자발적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7월에 식품류, 11월에는 화장품, 주류, 면도기 등으로 점차 확대되어 현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총 65개 유통·제조업체가 판촉용 포장재를 줄이는 ‘그린 마일리지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은 환경에 유해한 판촉용 포장재를 없애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지키자는 캠페인이다. 2008년에 2007년 대비 30퍼센트를 줄인 후 매년 10퍼센트씩 추가로 줄여 5년이 되는 2012년까지 총 80퍼센트를 줄이는 ‘30-80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판촉용 포장재 줄이기 운동은 제조업체의 재료비, 작업 비용 등을 절감하고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는 효과가 있다. 또 제품 판촉용 포장재 생산 등에서 줄인 비용만큼 그린 마일리지 형태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서 소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묶음포장으로 할인된 가격에 사면서도 2퍼센트의 마일리지 적립까지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호응도도 높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로서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얻는 동시에 구입 후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된 것이다.

11개 제조업체 ‘판촉 포장재 줄이기’ 1천여 톤 성과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판촉용 포장재 줄이기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11개 제조업체에서 총 1천1백50톤(약 26억6천5백만원)에 이르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이는 불필요한 포장재를 만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를 그만큼 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5개 유통업체에서는 소비자에게 판매가의 2퍼센트를 그린 마일리지로 부여해 7억7천6백만원의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갔다.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린 마일리지 캠페인을 통해서는 가능해 보인다. 소비자, 기업,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그린 마일리지 캠페인의 탄생은 그래서 더욱 반갑다. G

글·권기대(나라경제 기자) / 사진·정경택 기자

품목별 판촉용 포장재 절감량 단위 : 톤/년

구 분	샴푸/린스	보디케어	세제류	생리대
절감량(톤)	612.9	188.2	317.1	32.6
대상업체수(개소)	6	7	4	3

연도별 절감 목표 단위 : 기준연도 대비 %

구 분	기준연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사용량	100%	70%	60%	50%	40%	20%

‘탄소포인트’ 3종 세트 합친다

탄소캐시백, 탄소포인트, 그린마일리지 등 3개 제도를 통합, 적립된 포인트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용자는 모아 쓸 수 있어 편리하고, 정부로선 시스템 운영비를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다.

동아DB

8월부터 탄소캐시백, 탄소포인트, 그린마일리지 3개 제도가 통합돼 적립된 포인트를 실생활에서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다.

누구나 한 번쯤 항공사, 주유소, 백화점, 신용카드 등의 마일리지를 ‘한군데로 모아서 크게 쓰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포인트 3종 세트도 마찬가지. 8월부터 탄소캐시백, 탄소포인트, 그린마일리지 등 부처 별로 운영 중인 제도가 통합 운영되고 있다.

지식경제부 진홍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은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운영하는 탄소캐시백, 탄소포인트, 그린마일리지 등 3개 제도의 특성을 살리되 적립된 포인트는 통합했다”며 “7월 말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8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제도는 에너지 사용 요금을 절약하게 해주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포인트의 묘미는 적립과 혜택. 어떻게 아끼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을 줄인 만큼 포인트를 적립받아 그만큼 아파트 관리비를 할인받거나 교통카드, 상품권,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을 받는 제도다. 현재 지자체에 따라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 활용 방법 역시 지자체별로 다르다. 인천광역시는 포인트 등급에 따라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구는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식경제부가 운영하는 탄소캐시백은 CO_2마크가 붙은 저탄소 제품을 구매하거나 저탄소 실천매장을 이용하면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적립된 포인트는 탄소캐시백 가맹점과 OK캐시백 가맹점(주유소 제외), 대중교통, 저탄소 공익프로그램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코레일 철도 승차권도 구매할 수 있다.

포장재 생산을 감축한 제품을 구입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그린 마일리지는 기업과 대형마트가 동참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다. 애경산업, LG생활건강, 농심, 피죤 등 47개 제조사와 롯데마트,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16개 유통사가 참여 중이다. 소비자가 포장재 감축제품을 구매하면 판매금액의 2퍼센트 내외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제공하는데, 적립된 마일리지는 구매한 유통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통합으로 3곳에 나누어져 있던 포인트(마일리지)를 하나로 모아 OK캐시백 가맹점이나 코레일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직은 통합 포인트(마일리지)를 탄소포인트나 그린 마일리지처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진홍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은 “앞으로 관련 기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용범위를 더욱 확대해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G

글 · 차선아 객원기자

모니터 가족영상 보며 눈물이 줄줄…

교도소 가족 영상편지 호응… '따뜻한 법치' 실현

법무부 교정본부는 가족의 소식을 담은 영상편지를 매월 2편 이상 제작해 수용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면회시스템을 개선한 영상편지 교환 프로그램은 소외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법치' 실현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동아DB

가족들이 둘러 앉아 수용자의 수감생활과 메시지가 담긴 영상편지를 보며 훈훈한 정을 나누고 있다.

#1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6년째 복역 중인 고길동(가명·33) 씨는 최근 자신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외지에서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부모와 한 달 전 아기를 낳은 여동생의 근황이 담긴 영상편지를 받았다. 고 씨는 "부모님의 생활을 머릿속으로만 그려온 터라 무척 답답했는데 영상편지를 통해 가족들의 생활을 직접 보고 큰 위안을 얻었다"며 고마워했다.

#2 수감생활을 하는 딸에게서 영상편지를 받은 김분례(가명·56) 씨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딸의 모습이 마음에 걸려 "시간이 약이다. 웃음을 잃지 말고, 아프지 말고, 잘 지내거라" 하고 영상편지로 답장을 보냈다. 김 씨는 "가족이 함께 모여 딸의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가족의 소식을 딸에게 자세히 전할 수 있어서 무척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면회시스템을 좀 더 편안하고 따뜻하게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교도소 수용자와 가족 간 영상편지 교환 프로그램이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긴 시간을 들여 어렵게 교도소를 찾아가도 고작 10여 분밖에 만나지 못하는 면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용자와 가족에게 커다란 위안이 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수용자 가족을 방문해 집안 곳곳과 부모 형제들의 영상을 촬영한 후 배경음악 삽입 등 편집 과정을 거쳐 수준 높은 영상편지를 매월 2편 이상 제작해 수용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중에서 수용자와 가족의 동의를 얻은 영상편지는 교화방송센터의 방송용으로 다시 편집해 전국 47개 교정시설 수용자들로 하여금 시청하게 하고 있다.

영상편지 제작 신청자는 주로 장기형을 선고받은 수용자들이다. 이들은 접견을 자주 하지 못하거나 접견 시간의 제약으로 그동안 못 다한 이야기를 영상편지를 통해 풀어놓는다.

법무부 교정본부 한희도 사회복지과 사무관은 "영상을 보기 위해 노트북 컴퓨터 앞에 앉은 가족들은 수용자가 가족을 향해 절절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고 열심히 수감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대견해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런 감동적인 모습과 가족의 근황, 수용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가족사진 등을 담은 영상은 해당 교정기관에 보내 수용자가 직접 시청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용자와 가족 모두 만족… '따뜻한 법치' 실현

이러한 영상편지 프로그램을 접한 수용자들은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됐다"는 내용의 편지를, 또 가족들은 "제작진이 성심을 다해 진행하고 교정시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주어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다. 정말 감사하다"는 글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법무부 이태희 교정본부장은 "영상편지를 활용한 교화 프로그램은 수용자와 가족 간의 끈을 따뜻하게 이어줄 뿐 아니라 수용자들이 좀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영상편지 교환을 더욱 활성화해 법무부의 정책목표인 '따뜻한 법치'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희망은 있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

재산도 적고 생계비까지 막막한 우리가족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과 큰 힘이 되었습니다!

희망의 싹이 활짝!

지금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09년 5월 25일 ~
12월 9일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최대한 도와 드리겠습니다

- **지 급 대 상** : 소득은 최저 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저소득층
- **담 보 재 산** : 주택,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
- **대 출 한 도** : 최고 1천만원,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 지급

가구원수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월 지급액	49만원	83만원	108만원	132만원	150만원
지급개월수	약 20개월	약 12개월	약 9개월	약 7개월	약 6개월

- **대 출 조 건** : 대출금리 7% (본인부담 3%), 2년거치 5년 상환(중도상환 가능)
- **신 청 기 간** : 2009년 5월 25일(월)부터 12월 9일(수)까지
- **취 급 장 소**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일부 저축은행
- **추 진 체 계** : 금융기관(상담·신청서 접수, 소득·조사요청) → 시군구(소득·재산조사 및 통보) → 금융기관(대출심사, 담보설정 및 대출금 지급)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이란?

최근 경제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진 최저생계비이하 소득의 저소득층이 보유한 재산을 담보로 저금리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 (www.mw.go.kr) 및 취급장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www.kfcc.co.kr ☎1599-9000

www.cu.co.kr ☎ 042)720-1311~2

www.fsb.or.kr ☎ 02)397-8600

2조8000억원대 허위 계산서 조직 적발한 대전지방국세청

"7473억 추징 판결 받아냈죠"

감사원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잘못을 캐내기만 하는 곳은 아니다. 국가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거나 공직자들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과 기관을 발굴해 격려하는 것도 주요 임무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국가경제에 피해를 준 국내 최대 석유류 자료상 조직을 검찰과 공조해 일망타진한 대전지방국세청 등 감사원에서 인정한 모범 사례들을 소개한다.

대전지방국세청이 압수한 인천 연수파 세금 탈루 현금과 서류들.

자료상이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탈루하고 국가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범법조직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자료상의 규모가 전국 단위의 기업형 조직으로 전문화, 대형화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 초 대전지방국세청(조사2국1과)은 소위 '인천 연수파' 라고 불린 전국 최대 규모의 석유류 자료상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인천 연수파는 2005년부터 인천과 천안 등지에서 17개의 유령회사를 세우고 전국 2백63개 주유소와 석유대리점 등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뒤 발행가액의 2, 3퍼센트를 수수료로 받는 수법으로 약 4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관련 업종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자료상 경리 경력이 있는 자 등 전문인력을 확보해 자료상 조직을 결성하고, 전과자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4, 5개의 자료상 행위 업체를 설립했다. 그리고 6개월 단위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자료상 행위를 자행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이 이들의 존재를 안 것은 지난해 11월. 천안 지역에 2천억원대의 석유류 자료상 혐의자인 (주)J에너지가 출현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인터넷 접속 IP주소를 추적했다. 그 결과 천안을 비롯해 부산, 경산, 인천, 구리 등 5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료상 사업장을 적발할 수 있었다. 그동안 이들 자료상은 국세청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자료상 실행위는 인천지역에서 행하면서 사업자등록은 전국으로 광역화하고 있었다.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대전지방국세청은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동시에 공조를 요청했다.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1과 박영자 과장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과의 공조는 과정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조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사 착수부터 기소까지 단기간에 사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휴일 없는 밤샘 수사… 전국 최대 규모 조직 적발

수사기관과 공조하면서 국세청 12명, 검찰 8명, 경찰 10명 등 총 3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이 꾸려졌다. 이들은 천안, 부산, 경산, 인천, 구리 등 5곳의 자료상 사업장을 압수수색해 17명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구속집행기간 20일 동안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1과의 서길원 조사팀장과 3명의 팀원들은 긴급체포자 17명에 대한 심문은 물론 압수서류 20여 박스를 분석함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1과는 검찰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최대 석유류 자료상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왼쪽부터 박종인, 서길원(조사팀장), 도해구, 박소영.

으로써 모든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

서길원 조사팀장은 "그 20일을 돌이켜보면 정말 대단했다"고 회상했다.

"수사기관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었기 때문에 조사반은 대전에서 천안으로 출근해야 했어요. 주인 없는 검찰청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는 것은 보통이었고, 눈 오는 날 새벽에 천안에서 대전으로 퇴근하다 위험한 상황을 겪은 팀원도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주말을 반납했고 심지어는 부모님 생신 때도 조사를 했죠."

"조사반은 대전에서 천안으로 출근해야 했어요. 주인 없는 검찰청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는 것은 보통이었고 눈 오는 날 새벽에 천안에서 대전으로 퇴근하다 위험한 상황을 겪은 팀원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대전지방국세청이 처음 조사에 착수할 때에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총액이 1개 업체 2천억원대였던 것이 기소될 때에는 17개 업체 2조8천억원대로, 그리고 1명으로 예상했던 자료상 행위자가 최종고발될 때에는 28명으로 늘었다. 서 팀장은 "자료상 조직이 고구마줄기처럼 마구 뽑혀 나왔다"고 말했다.

기업형 자료상 조직인 인천 연수파에 대해 지난 6월 22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조세 포탈 등의 혐의를 적용해 13명에 대해 징역 1~4년, 집행유예 2, 3년을 선고하고 벌금 7천4백73억원을 추징토록 판결했다. 그리고 자료상 법인 7개 업체에 대해서는 6백만~7백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번 수사는 몇가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국세청에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해 검찰에 고발한 경우는 많았지만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거나 피의자가 도주해 기소중지 처리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세청과 수사기관의 공조로 큰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금까지 자료상의 범법행위가 기업형으로 거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의 전모가 발각되지 않았다. 국세청에 적발되면 당해 업체만 조사를 받아 '꼬리 자르기' 식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박영자 과장은 "인천 연수파 사건을 계기로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자료상들에 대한 일괄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일괄 조사를 위해 자료상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실행위자, 딜러, 자료상 중개자, 회계 처리자 등에 대한 정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

글 · 백경선 객원기자

정보통신사업법 개정… IT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사업자등록 갱신 안 했다고 영업정지?

무자격 IT서비스업체 퇴출을 위해 만든 정보통신공사업법이 IT서비스업체들의 발목을 잡아왔다. 이에 법제처는 법을 개정해 IT서비스업체들을 규제로부터 해방시켰다.

동아DB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완화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 사진은 지난 6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 IT쇼 2009.

지난해 5월 연매출 2조원이 넘는 정보기술(IT) 서비스업계 선두기업인 A사가 갑자기 영업정지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업계가 깜짝 놀란 가운데 영업정지 위기에 몰린 이유를 알고 보니 담당 직원의 부주의로 사업자 등록 갱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등록 후 3년마다 시도지사에게 등록 갱신을 신고해야 했다. 신고를 누락하면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돼 있었다. A사는 지난해 3월이 신고 마감이었으나 담당 직원이 관련협회에 신고한 것을 서울시에 신고한 것으로 착각하고 정작 서울시에는 등록 갱신을 하지 않아 3개월 영업정지를 통보받았다. 원래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3년마다 등록 갱신을 하게 한 것은 무자격 업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무자격 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이었지만 단순한 등록 갱신 미신고 업체에 대해서도 무자격 업체와 똑같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어 업계로부터 '좀 지나치다'는 반응을 들어왔다.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 중 국내의 각종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 이 때문에 A사는 영업정지 통보를 받은 후 곧바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영업정지는 겨우 면했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시에서만 A사를 비롯해 크고 작은 정보통신공사업체 40여 곳이 단순히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 갱신 누락 때문에 영업정지 3개월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제재 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제재 전에 시정기회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 국무회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각각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과도한 규제 개선을 검토했다.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만… 사업자 불만 크게 줄어

그 결과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등을 개정해 건실한 정보통신공사업체가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 경우 등록 갱신 누락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경고제도를 도입, 법 개정 시점 이전 최근 3년간 등록 갱신 누락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대신 경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은 올해부터 갱신 신고를 누락한 정보통신공사업자 대부분이 1차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는 것에 그쳐 개정 이전에 비해 단순 갱신 누락에 따른 처벌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 글 · 박경아 기자

4대강 살리기
제 21 화
글·이연수 그림·이호

가을이 다가오네. 슬슬 도토리를 모으기 시작해야겠는데.
다람쥐
쥐목 다람쥐과
학명: Tamias sibiricus
타미아스 시비리쿠스

올해는 몇 개나 모아야 할까?
음, 내년 이맘때까지 애들하고 같이 먹으려면 천 개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여보, 올해는 그중에서 스무 개만 땅에 심자.

나 원 참, 천 개 모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면서 왜 그래?

당신 지난 집중호우 때 계곡물 불어나는 거 봤지? 사람들 막 실종되고 그랬잖아.
?

비 올 때마다 그 난리 치는 거, 그거 다 숲이 무성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앞으로 우리 애들 살 곳이잖아. 우리가 투자 좀 해서 참나무 숲을 가꾸는 데 한몫하자, 응?
에이~ 당장 먹을 것도 부족한데….

이 나라 인간들도 앞으로 3년 동안 국가 예산의 2%를 치수에 쓴다는데 우리가 그 정도도 못 해?
그건 4대강, 그러니까 큰 강들 얘기 아니야?

아니, 큰 강들 외에 집중호우 때마다 물난리를 겪는 이런 계곡과 지류도 손본대!

정말인가보네. 지금껏 인간들에겐 아무 생각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미래를 위해 2%만 투자하자고!
알았어! 까짓것 우리 숲과 우리 애들을 위한 건데 아까울 거 없지!
어차피 어디다 묻었는지 다 잊어버리실 거면서….

조영철 기자

농수산식품안전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과자, 분유 등 가공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 대한 궁금증과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농수산식품안전정보시스템' 본격 가동

'먹을거리 안전' 인터넷으로 확인

식품 관련 사고가 나면 소비자들은 어디서 정보를 얻어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다. 그러나 이젠 식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농수산식품안전정보시스템(foodsafety.go.kr)'에 접속하면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8월 20일 한국소비자원은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지역의 재래시장과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수입 버섯 6개 품목 60개 제품을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사를 맡긴 결과, 57개 제품에서 표백제 등의 성분인 이산화황이 검출됐으며 21개 제품은 허용기준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가을엔 과자에 유해물질인 멜라민이 들어 있어 어린이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언론보도에 소비자들이 기겁을 했고, 유아들이 먹는 우유에서도 발암물질이 발견돼 세상을 발칵 뒤집어놓기도 했다. 걸핏하면 터지는 중국산 농수산물의 '엽기적인' 식품 사고를 대하면 소비자들은 '옛날처럼 직접 농사지으며 자급자족하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한숨만 절로 나온다.

농수산물 안전성·식품첨가물 정보 등 바로 확인

이런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방법이 생겼다. 이제부터 과거와 같은 '먹을거리 파동'이 닥칠 경우 '농수산식품안전정보시스템(이하 식품안전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그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소비자들이 먹는 식품의 안전성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김경미 사무관은 "이 시스템에 접속하면 농수산물에 대한 회수·검사 정보에서부터 안전관리정책, 위험정보 교류 등 다양한 정보가 정리돼 있다. 이를 통해 주부들이 구입한 농수산물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실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에 각각 분리해 운영하던 안전정보시스템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했다는 점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정보시스템과도 연결(링크)돼 있어 과자, 분유 등 가공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 대한 궁금증과 정보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식품정보 제공 전문기관 등을 통해 국내외 위험 정보도 신속하게 수집해 상시 제공한다. 따라서 가장 빈번히 문제가 되는 중국산 농수산물을 비롯한 수입 농수산물, 가공식품 등의 안전성 여부를 제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방적인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이 직접 발견한 문제와 피해사례 등을 제공하는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다.

이 밖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생 악성물질 출현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어려운 내용 등의 식품위험 정보들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식품안전 검사 및 회수 현황, 불합격 업체명, 불합격 사유 등을 제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향상시켰다.

김경미 사무관은 "과학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쌍방향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어 식품안전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G

글 · 최철호 객원기자

대형할인점·아파트 단지에 식품기부함 설치

나눔의 기쁨은 키우고 세금은 줄이고

푸드뱅크까지 직접 찾아갈 필요 없이 집 근처 대형할인점만 가도 식품 기부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 대형할인점, 아파트 단지 등 공공장소 3백50개소에 식품기부함을 마련했다.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사는 주부 강연희(33) 씨는 지난주 처음으로 푸드뱅크에 식품을 기부했다. 기회가 되면 기부에 동참하겠다고 생각해왔던 강 씨는 장 보러 나왔다가 대형할인점의 푸드뱅크 식품기부함을 발견하고 캔과 병제품 등 장기 보존이 가능한 식품 일부를 기부함에 넣었다. 푸드뱅크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생활필수품 및 식품을 기부받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창구다.

"장을 본 즉시 그 자리에서 기부가 가능해 편하기도 하고, 함께 장 보러 간 주부들에게도 동참을 권할 수 있어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7월부터 전국 대형할인점, 아파트 단지 등 3백50개소에 식품기부함을 설치 운영 중이다. 기존 푸드뱅크 네트워크는 전국에 2백85개소(서울 53개소)가 있지만 개인이 매번 물품을 가지고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식품기부함 설치는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해 개인의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경기침체로 기부 물품은 줄어든 대신 푸드뱅크 이용자는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1월부터 7월 사이 식품 기부액은 지난해 같은 시기 2백69억원에서 2백56억원으로 4.8퍼센트 줄었다. 반면 기부 식품 이용자는 13만5천명에서 15만8천명으로 17퍼센트나 늘었다. 나눔의 미덕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시장 보고 즉석에서 기부… 기부문화 확산 일조 기대

"식품기부함이 설치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기부량이 눈에 띄게 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공장소에 기부함을 설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기부문화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좀 더 폭넓은 동참을 유도한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지요."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자원과 김금찬 사무관의 설명이다.

현재 식품기부함이 설치된 곳은 롯데마트 서울역점, 송파구 문정동 GS마트, 성동구 행당동 GS마트 등 대형할인점과 대단위 아파트 단지, 종교시설 등이다. 쌀, 라면, 국수 등 주식류와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장류는 물론 조미료, 고춧가루 등 양념류와 건조식품 등을 주로 받고 있다. 이렇게 기부받은 물품은 푸드뱅크를 통해 복지시설이나 기관에 전달되거나 전국 45개소 푸드마켓에 배치된다.

식품기부함 전국 대표전화 또는 전국 푸드뱅크로 전화하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식품기부함의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다. 나눔의 기쁨과 함께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부의 또 다른 매력이다. 현재 세금 혜택은 식품류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비누, 치약, 화장지 등 생활용품까지 혜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중이다. G

글 · 김정희 객원기자

식품기부함 전국 대표전화 Tel **1688-1377**
전국 푸드뱅크 Tel **02-713-1377**

정경택 기자

식품기부함 설치로 푸드뱅크까지 직접 갈 필요가 없어 식품 기부가 더 편해졌다.

올 최고의 '차이코프스키'를 만나다

발레 '차이코프스키'

일시	9월 10일(목)~13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 7시 30분 일요일 오후 3시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관람료	VVIP석 15만원,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1만원, C석 5천원
문의	02-587-6181 www.sac.or.kr

올해 발레공연 중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힌 국립발레단의 '차이코프스키'가 9월 10일 드디어 막을 올린다. 발레 '차이코프스키'는 2006년 무용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브누아 드 라 당스' 최고 안무상을 수상한 보리스 에이프만의 작품으로, 그에게 러시아의 토니상으로 평가되는 '황금마스크상'을 안긴 작품이기도 하다.

이 공연에서는 청년 시절 창작의 고통에 몸부림치던 차이코프스키가 공상과 현실의 혼돈 속에서 방황하다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룬다. 음악의 감동을 춤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탁월한 러시아의 국민안무가 에이프만은 차이코프스키의 고뇌와 작품에 투영된 아름다운 상상들을 발레라는 상징성 강한 장르로 드라마틱하게 표현한다.

특히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의 주요 인물을 차이코프스키와 함께 등장시켜 예술가의 내면세계를 드러내는 부분은 에이프만의 상상력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그중에서도 백조를 형상화한 발레의 향연은 놓쳐서는 안 될 볼거리다. 차이코프스키의 선한 내면을 상징하는 백조는 검은 새로 표현되는 그의 어두운 내면과 끊임없이 대립한다. 생전 차이코프스키가 얼마나 큰 고통과 번민을 겪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차이코프스키 역은 독일 베를린 슈타츠 발레단의 수석무용수이자 예술감독인 블라디미르 말라코프와 국립발레단의 간판스타 김현웅, 이영철이 번갈아 연기한다. 차이코프스키의 부인 밀류코바 역은 현재 에이프만 발레단의 솔리스트인 나탈리아 포보로지뉴크와 한국 발레 대중화에 앞장서온 김주원, 김지영이 맡았다.

이번 공연을 이끌고 있는 국립발레단의 최태지 예술감독은 "발레 '차이코프스키'는 국립발레단의 예술적 수준이 세계 스타들과 같은 무대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현대적 발레를 연기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G

글 · 김지영 기자

플라멩코컬 '카르멘'

일시	9월 11일(금)~12일(토) 오후 7시 30분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람료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의	02-3487-0678 www.ntok.go.kr

프랑스 작곡가 비제의 작품인 오페라 '카르멘'의 내용을 플라멩코 무용극으로 재구성했다. 플라멩코의 저변 확대를 위해 기획된 이 무용극은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는 스페인 정부 후원 작품으로 지정됐다. 총 4막으로 이뤄졌으며 주인공 카르멘 역을 맡은 롤라 장과 호세 역의 조용수, 미카엘라 역의 에바 장 등 33명의 배우가 출연해 플로멩코의 진수를 선보인다.

테마전 '인도미술, 신과 인간의 이야기'

일시	10월 4일(일)까지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관 중앙아시아실
관람료	무료
문의	02-2077-9555 www.museum.go.kr

국립중앙박물관이 최근 박물관에서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인도 미술품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 작품은 간다라의 불교 조각을 비롯해 인도 서북부, 동부, 남부 지역의 불교 및 힌두교 신상(神像), 17~19세기 회화 등 총 43점이다. 특히 2008년 기증품인 '간다라 보살상'은 2, 3세기에 제작된 높이 1백17센티미터의 대형 조각으로, 사실적인 묘사와 품위 있는 자태가 돋보이는 걸작으로 꼽힌다.

행복의 조건

글과 그림 · 최영순

행복해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욕심을 줄이든가, 가진 것을 늘리든가... 어느 쪽이 더 쉽겠는가?
– B.프랭클린(미국 정치가)

경제 한파 끝나면 산업계 지각변동…
녹색이 경쟁력이다

SERI 보고서로 읽는 미래산업

삼성경제연구소 엮음 / 삼성경제연구소 · 12,000원

GM, 리먼브라더스, RBS, K마트…. 한때 세계를 이끌었던 창업 1백년이 넘는 글로벌 기업들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2000년 이후 파산 혹은 쇠락의 길을 걸어 과거의 영광은 추억으로만 남았다. 특히 이 중에서도 2007년까지 77년간 세계 자동차 판매 1위를 지켰던 GM은 과거의 성공에만 만족하다 결국 지난 6월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렇듯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의 대변화이 점쳐지는 가운데 산업계에도 거센 변화의 물결이 밀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량생산으로 대표되는 20세기 체제가 종언을 고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이런 변화에 발맞춘 미래기술과 미래산업에 관한 보고서들을 엄선해 〈SERI 보고서로 읽는 미래산업〉을 펴냈다. 2007년부터 최근까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기술 관련 보고서들을 모은 것이다.

총 22개 보고서를 묶은 이 책은 '녹색성장' '신기술 · 신산업' 'IT(정보기술)산업' 등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있다. '녹색성장' 파트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화', 녹색기술과 친환경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는 '녹색산업화'에 주목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녹색경쟁력지수'를 개발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미국 등 15개국의 녹색경쟁력을 진단했다. 녹색경쟁력지수로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를 통해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분석 결과, 한국의 녹색경쟁력 수준은 종합 11위로 녹색산업화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 역사의 새로운 순간은 늘 위기 뒤에 찾아왔다.
> 글로벌 경제위기를 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 약으로 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녹색산업, 신기술 · 신재생산업, IT산업 등
> 21세기를 재편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한
> 보고서들을 한 권의 책으로 만나보자.

6대 미래기술 선정… 녹색산업화 전략 주장

하지만 아직 녹색산업이 초기 단계임을 감안할 때 세계 선도기업과의 격차는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신성장전략 산업에 관심을 두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경제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부와 기업이 환경문제를 규제나 의무로 여기지 않고 기술, 산업, 수출경쟁력을 축으로 구체적인 녹색산업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기술 · 신산업' 파트에서는 미래를 주도할 기술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과거 한국 경제는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 등에 힘입어 조선, 자동차, IT 등 주력산업을 탄생시켰다. 경제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래 시장성, 산업 간 파급효과 및 기업역량 등을 기준으로 국가가 주도해야 할 6대 미래기술을 선정했다.

IT를 활용해 전력과 교통, 물류 등 사회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지능형 인프라', 단백질과 유전자 등 생체물질 자체를 치료제로 사용하는 '바이오 제약'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술들을 국가가 주도해 키워나가면서 민간 부문으로 이양해 사업화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이 보고서는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IT산업' 파트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라 부진을 겪고 있는 세계 IT업계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불황을 통해 IT기업들은 신성장 분야로 진출을 가속화하면서 대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스마트폰, 태양전지 등 유망 분야에 예상치 못한 기업이 경쟁자로 부상하는 등 업계 구분을 넘어서는 경쟁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도 20세기 전통산업에서 21세기 IT사업까지 눈부신 성과를 보여왔다. 현재 세계적 경제불황이라는 거대한 산 때문에 넘지 못할 암벽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예전에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극복했듯이 한국 경제는 이번에도 신(新)산업을 창출해 21세기 산업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G

글 · 김민지 기자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www.mosf.go.kr

〈2009 세제개편〉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이 우선입니다!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먼저 생각합니다

-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체납세금 500만원까지 면제
- 성실 세금납부업자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연장
- 소규모 음식·숙박·소매업자 부가세 특례 연장

- 소형주택 월세금액의 40% 소득공제(연 300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 취약계층 대상 기부금의 세제지원 확대
- AIDS 등 희귀병 치료제 부가가치세 면제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연장

-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한도 500만원으로 확대
- 낙후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의 법인세 감면 확대
-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감면 확대

위기 이후 미래를 대비합니다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분야 R&D 세액공제 확대
- 녹색펀드 투자금 10%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 녹색예금·녹색채권의 이자소득 비과세
-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 개별소비세 부과

과세범위를 넓혀 나라살림을 안정시켜 나갑니다

-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 임대료 합산 등 상가 임대소득 과표 양성화
- 20년간 지속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종료
-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 고소득 근로자 소득세 감면 축소
-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세액 공제 폐지

4대강 살리기
알뜰하고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국가 예산 2~3%로 홍수와 가뭄을 근원적으로 예방합니다

- 최근 4년간 수해복구와 예방비로 16조원이 들었습니다.
- 이제 사후복구에서 예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40년간 방치했던 수자원과 생태계를 되살립니다

- 오염원을 차단하고 첨단보를 설치해 깨끗한 강물로 복원합니다.
- 자전거 도로, 둔치공원 등 전국의 강변과 지역문화가 살아납니다.

4대강 살리기는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 34만개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옵니다.

내년 SOC예산은 적정 규모로 지원하겠습니다

-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올해 SOC예산이 한시적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내년에는 경제가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발전 등에 효과가 큰 사업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미리 대비!
녹색성장 일류 국가!

대한민국정부